

연구보고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책임연구원 이유진

공동연구원 김영한 윤옥경

RESEARCH REPORT 2017

NYPI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교수)
- ▶ 연구보조원 : 임하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시대에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은 실제적으로 생산인구에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총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인구 대비 청소년인구의 구성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를 비롯해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증가, 청소년비행의 재범률 증가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양적 관리 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잠재력 발굴을 위한 역량증진 활동과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은 시대적 소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구절벽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고찰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이 연구가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관련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청소년들이 한명도 낙오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 이 연구를 추진한 원내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공동연구원 및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청소년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목적은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과 현행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방안과 청소년 사회문제 완화방안 등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고, 주된 연구방법은 델파이조사이다. 조사대상은 학계 전문가 10명, 공무원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이다.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했고,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 2차 조사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과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인구교육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요어: 인구절벽, 청소년역량강화, 인구교육, 청소년근로보호, 아동학대예방, 위기청소년지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선정했음. 이 과제의 목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이고, 이를 통해 초저출산 사회에서 탈피해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또한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교육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제시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소비와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인 ‘인구절벽’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지적하였음.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인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히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어 소비흐름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동아시아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에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해리 덴트, 2015: 54-66, PMG지식엔진연구소, 2016: 인터넷자료).
- 이러한 인구감소가 시대적 흐름임을 볼 때,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음. 2017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924만 9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인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청소년인구는 1980년 1,401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150만명, 2015년에는 965만 3천명까지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 698만명, 2060년엔 50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7: 45-46).
- 청소년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 다문화 및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갈등 문제 증가 등은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청소년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 및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과 현행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방안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완화방안 등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인구절벽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및 청소년정책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봄.
- 조사연구 : 전화피 조사방법을 통해 인구절벽 및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 조사대상은 학계 전문가 10명, 공무원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임.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음.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음.
- 전문가자문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1차 및 2차 정책실무협의회, 청소년정책포럼 등을 통해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문을 받음.

3. 주요결과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변화에 관한 의견

- 청소년정책의 인구대책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바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또한 청소년인구가 줄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대부분(27명)이었음.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합·혁신 과제로 제시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26명)의 전문가가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서도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체계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렴할 수 있고, 노동 체계에는 청소년보호정책 중 근로보호 정책을 수렴할 수 있으며, 복지 체계에는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세부 과제를 인구의 양적 관리 측면과 질적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19명)가 찬성하였음.
- 향후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처들이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17건)와 교육부(16건), 여성가족부(14건), 고용노동부(14건), 법무부(7건), 문화체육관광부(7건), 행정안전부(6건), 국토교통부(4건), 기획재정부(4건) 등이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되었음.
-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SWOT 분석을 하였음.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으로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내부적 약점으로는 ‘낮은 정책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이 1순위로 제시되었음. 인구절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위협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가 1순위로 제시되었음.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

-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1순위로 꼽았고,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이 2순위,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취약’이 3순위,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이 4순위,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역량강화 활동 미흡’이 5순위,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이 6순위, ‘인구절벽 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가 7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활동 취약'이 8순위 등의 순서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은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을 1순위로 꼽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이 2순위,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1회성 형식적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구관련 교육과정 부재'가 4순위,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교육인지 의식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이 5순위,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이 6순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음'이 7순위,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이 8순위,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이 9순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으로 '청소년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결여'를 1순위로 꼽았고, '청소년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이 2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이 4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5순위, '청소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이 6순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이 7순위,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가 8순위,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음'이 9순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을 1순위로 꼽았고,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이 2순위,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가 3순위,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4순위,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가 5순위, '고용관련 세대갈등(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이 6순위,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이 7순위,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이 8순위,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이 9순위,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부족'이 10순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

-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 중에서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으로 '아동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을 1순위로 꼽았고,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이 2순위,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 체계 미흡'이 3순위,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이 4순위,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5순위,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이 6순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7순위,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음'이 8순위,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미흡'이 9순위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을 1순위로 꼽았고,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2순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가 3순위,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이 4순위,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이 5순위,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이 6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연계체계 구축 미흡'이 8순위,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9순위,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10순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를 1순위로 꼽았고,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미비'가 2순위,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가 3순위,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이 4순위,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이 5순위,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이 6순위,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가 7순위,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존재'가 8순위,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9순위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정책과제

-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그 주 대상으로 하되,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다양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과 정책 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전담 기구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안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독립 기구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함. 현재 청소년 전담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과 지도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임.
-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 중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18: 35). 이 과제는 청소년 인구감소를 연결 지어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에서 청소년 인구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핵심과제를 이어가 되, 역량의 범위를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 및 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원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및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음. 지식위주 입시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교원 양성 제도의 개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그 교육적 효과성과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새로운 사회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개혁과 창의적 시도가 필요한 때임.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정책과제

-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관혼상제가 큰 의미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이 필요함. 관혼상제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의 고민을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야함.
-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함. 직장중심, 성과중심, 결과중심과 맞물리는 사회에서 가정중심, 과정중심의 핵심인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음. 출산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음. 따라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의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운동과 연계되어야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출산이 원초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출산 전후의 과정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임. 특정 이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음. 또한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환경 제공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하는 안전한 노동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이루어져야함. 청소년들이 훈련 및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현재에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일선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최소한 제공되어야할 청소년의 근로현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장정책이 마련되어야함.
-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 청소년보호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로보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음. 취업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노동권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음.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조건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함. 혼자서 일하더라도 걱정수면·식사와 규칙적 운동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은 새로운 자기관리/자율적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음.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 인구절벽 대책에 ‘결혼 및 출산, 일자리’를 삶 속에서 균형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함. 청년이 되기 전까지 한번도 ‘결혼 및 출산, 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일임. 당면한 과제인 일과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함.
-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청년은 인턴제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노동력착취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용주가 있음. 또한 유동적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문제이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청년고용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보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거나, 재미있고 즐거운 직업이 개인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함.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행복감이 조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행복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임.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시 경찰이 동행하도록 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강화하였음. 이러한 처벌적 개입의 강화와 더불어

치료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특례법에서 수강명령을 제도화 한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더 나아가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고위험군 위기 부모에 대해서는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함.

-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행위자가 격리된다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경우에 학대행위자 없이도 남은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연계 등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김은정, 2016: 38).
-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 정부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일회성의 교육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부모가 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진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성매매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이미 다양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의 정기적 시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임.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 위기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음. 행동의 최종적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힘이 존재함. 이런 맥락에서 사회는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이러한 포용의 전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 문제가 있어 집을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성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은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함.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 청소년의 이성교제, 임신, 출산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엄숙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청소년의 과업은 학업과 장래준비에 있고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척이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을 한 청소년, 나아가 출산을 한 청소년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됨.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더 낳아서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출산청소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그들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가져야함.
-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함.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신 시 의료와 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 임신, 출산,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함. 또한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규모 집단상담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당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임.

-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 임신출산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안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음. 미혼모가 거주할 곳이 없어 켜질방을 전전하는 등 보호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6
II.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문제 현황분석	7
1.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	9
2. 인구절벽과 지역 격차	13
3. 인구절벽과 청소년문제	15
4. 소결	25
III. 인구절벽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27
1. 교육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29
2. 노동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34
3. 복지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45
IV. 전문가 의견조사	57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62
V.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89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91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06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15

VI. 결 론	137
1. 주요결과	139
2.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59
부 록	167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169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177

표 목차

〈표 II-2-1〉 지방소멸위험도 상위 20개 지역 순위	13
〈표 II-3-1〉 총인구 및 청소년인구 추계(2010-2065)	15
〈표 II-3-2〉 학령인구 추계(2010-2065)	16
〈표 II-3-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17
〈표 II-3-4〉 청소년 가출 경험율	18
〈표 II-3-5〉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19
〈표 II-3-6〉 가구형태별 한부모 가구 현황	20
〈표 II-3-7〉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20
〈표 II-3-8〉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21
〈표 II-3-9〉 요보호아동 현황	22
〈표 II-3-10〉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23
〈표 II-3-11〉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율 추이	23
〈표 II-3-12〉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현황	24
〈표 II-4-1〉 분야별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25
〈표 III-3-1〉 아동학대 관련법의 내용	48
〈표 III-3-2〉 위기청소년 지원종류	50
〈표 III-3-3〉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실천율	53
〈표 III-3-4〉 인공임신 중절률	54
〈표 III-3-5〉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56
〈표 IV-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60
〈표 IV-2-1〉 현행 인구대책 중 청소년 관련 정책	64
〈표 IV-2-2〉 협력이 필요한 부처(다중응답)	65
〈표 IV-2-3〉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66
〈표 IV-2-4〉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약점	67

〈표 IV-2-5〉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	68
〈표 IV-2-6〉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험요인	69
〈표 IV-2-7〉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	70
〈표 IV-2-8〉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71
〈표 IV-2-9〉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중요도(다중응답)	72
〈표 IV-2-10〉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	74
〈표 IV-2-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75
〈표 IV-2-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 정책의 문제점	76
〈표 IV-2-13〉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77
〈표 IV-2-14〉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	78
〈표 IV-2-15〉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80
〈표 IV-2-16〉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	81
〈표 IV-2-17〉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82

〈표 IV-2-18〉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83
〈표 IV-2-19〉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85
〈표 IV-2-20〉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	86
〈표 IV-2-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87
〈표 V-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117
〈표 V-3-2〉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	119
〈표 V-3-3〉 아동학대 예방기관 설치 수	120
〈표 V-3-4〉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122
〈표 V-3-5〉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127
〈표 V-3-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현황	129
〈표 V-3-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시설현황	131

그림 목차

【그림 I-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5
【그림 II-1-1】 청소년인구 및 총인구 대비 구성비 추계(1970-2060)	10
【그림 II-1-2】 생산가능인구(1965-2065)	10
【그림 II-1-3】 연령별 인구구조	11
【그림 II-1-4】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11
【그림 II-1-5】 결혼 건수 및 출생아 수	12
【그림 III-1-1】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모형	33
【그림 III-3-1】 이슈로 보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46
【그림 III-3-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47
【그림 III-3-3】 위기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운영 체계	51
【그림 III-3-4】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6-2017)	53
【그림 VI-1-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SWOT 분석	140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다른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쳐 혼란을 최소화했던 노력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김선업, 2014: 3, 김병석, 서원석, 2014: 2).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인구’ 유출에 따른 노인문제나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선정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결혼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이고, 이를 통해 초저출산 사회에서 탈피해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제시했다. 현재까지의 초저출산²⁾ 현상에 따르면 향후 5년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녀 양육·보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과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통해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고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을 회복할 계획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소비와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인 ‘인구절벽’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지적하였다. 해리 텐트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인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급속도

1) 제1장은 이유진이 집필하였음.

2)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의 40만6200명보다 11.9% 감소했다.

<http://premium.mk.co.kr/view.php?no=21608> (매경프리미엄, 2018.3.1)

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히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어 소비흐름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동아시아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에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해리 덴트, 2015: 54-66, PMG지식엔진연구소, 2016: 인터넷자료).

이러한 인구감소가 시대적 흐름임을 볼 때,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실제로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924만 9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인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청소년인구는 1980년 1,401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150만명, 2015년에는 965만 3천명까지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 698만명, 2060년엔 50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인구의 구성비도 1980년 36.8%에서 2000년 24.5%, 2015년엔 18.9%까지 낮아졌고, 2030년에 13.2%, 2060년엔 11.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7: 45-46).

이러한 청소년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 다문화 및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갈등 문제 증가 등은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청소년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 및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과 현행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방안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완화방안 등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단계 실행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	2017년 8-9월	○ 선행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 연구진 회의(수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서 제출	2017년 8-9월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서 제출
	문헌연구	2017년 9-11월	○ 이론적 배경 ○ 정책현황 및 통계분석
	전문가조사 1차 조사도구 개발	2017년 10-11월	○ 조사계획 수립 ○ 조사도구 개발(개방형)
↓			
2단계 중간보고 및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17년 11-12월	○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
	전문가조사 1차 실시	2017년 12월	○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코딩
	정책협의회 1차 개최	2017년 12월	○ 관련 부처 공무원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관련 부처 공무원 의견수렴
	전문가조사 2차 조사도구 개발	2017년 12월	○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도구 개발(선택형)
↓			
3단계 최종보고 및 인쇄	전문가조사 2차 실시	2018년 1월	○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코딩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18년 1-2월	○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정책협의회 2차 개최	2018년 3월	○ 연구결과 검토 ○ 정책대안 모색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인쇄	2018년 3-4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서 인쇄 ○ 청소년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결과 발표

【그림 1-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3. 연구내용

첫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된 청소년의 삶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인구절벽 현상에 관한 이론과 청소년 인구구조의 현황과 미래전망,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둘째,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된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정책 환경에 미칠 영향과 인구절벽 시대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역량과 인구의식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신정부의 정책방향³⁾을 반영하여 교육·노동·복지 체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써 인구절벽에 관한 선행연구⁴⁾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및 청소년정책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본다.

둘째, 조사연구⁵⁾로써 델파이조사를 사용한다.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해 인구절벽 및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셋째, 이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실무협의회, 청소년정책포럼 등을 통해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문을 받는다.

3)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인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참조

4) 인구절벽과 청소년정책을 직접 연결 지어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5)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3장 제1절 조사개요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II 장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문제 현황분석

1.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
2. 인구절벽과 지역 격차
3. 인구절벽과 청소년문제
4. 소결

제 II 장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문제 현황분석⁶⁾

1.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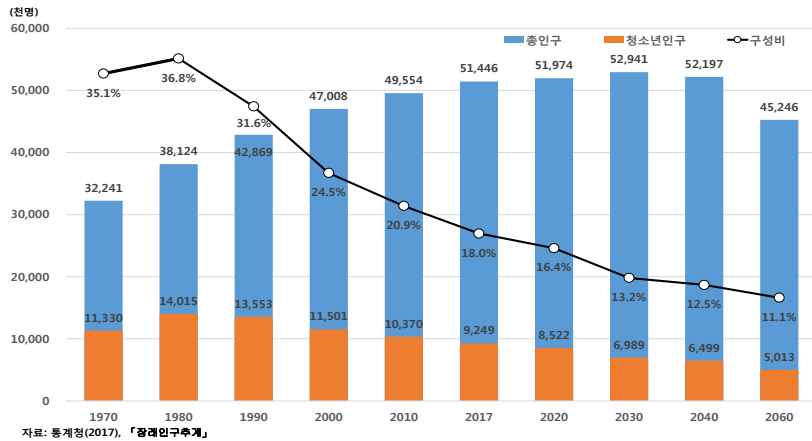
인구절벽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출산⁷⁾ 이고,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1987년 기간 중 6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한 후 2015년에는 1.24명으로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2065년경에도 1.4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낮은 출산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박강용, 2006: 52-53).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와 성장둔화 문제, 국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문제, 노인부양 문제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김원규, 황원식, 2017: 21-24).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실제로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17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924만 9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인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청소년인구는 1980년 1,401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150만명, 2015년에는 965만 3천명까지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 698만명, 2060년엔 50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인구의 구성비도 1980년 36.8%에서 2000년 24.5%, 2015년엔 18.9%까지 낮아졌고, 2030년에 13.2%, 2060년엔 11.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7: 45-46).

6) 제2장은 김영한이 집필하였음(그림 II-1-1과 분석은 이유진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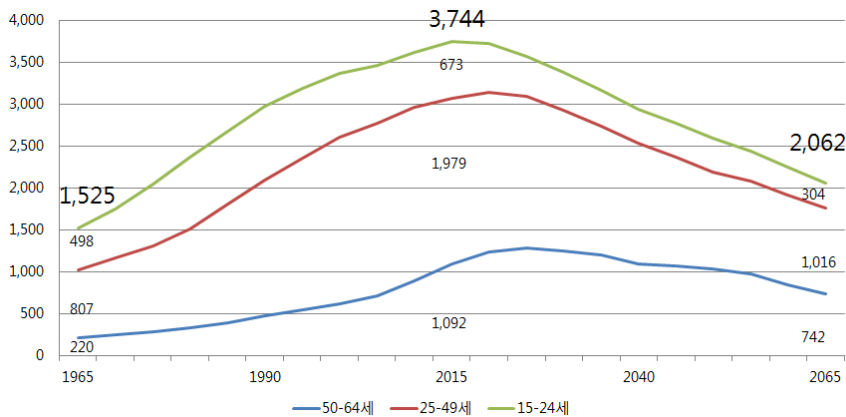
7) 저출산에 대해 1965년 UN은 합계출산율 4.1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2.5 수준 이하를 저출산의 범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2.1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1-1】 청소년인구 및 총인구 대비 구성비 추계(1970-2060)

* 출처: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아래 그림은 1965년 이후 2065년까지 우리나라 생산인구 변화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3,744만명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후 2065년 2,062만명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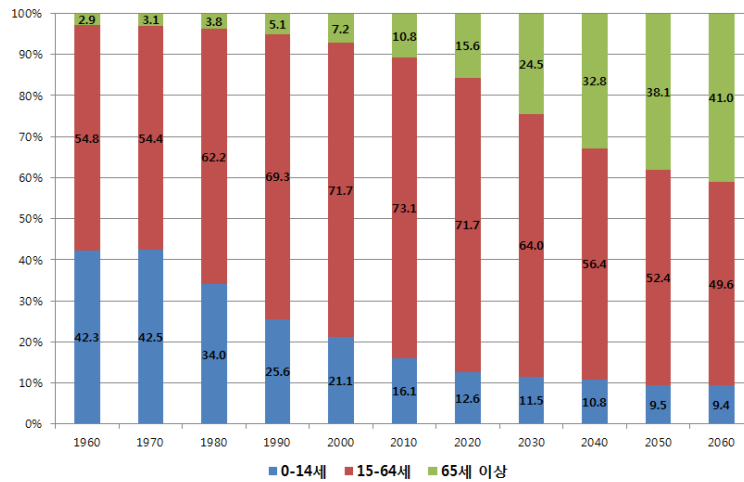
【그림 II-1-2】 생산가능인구(1965-2065)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아래 [그림 II-1-2]의 연령별 인구구조 및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를 보면 1960년에 54.8%에서 2010년 7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후 2060년에는 49.6%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2060년에는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 1.2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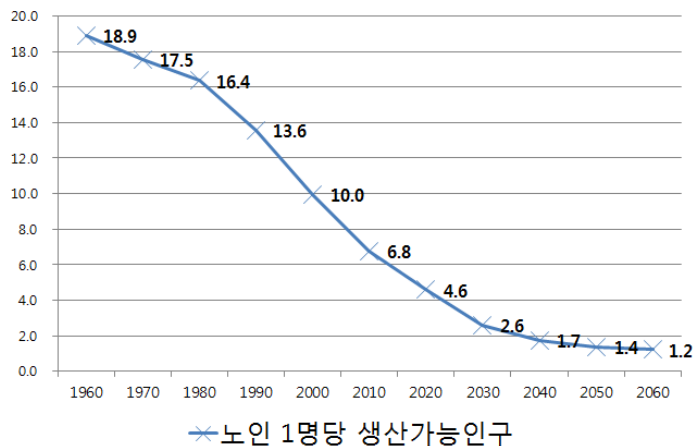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어야 할 유소년인구 비율은 1960년 42.3%에서 2060년 10.2%로 급격하게 낮아지며, 2060년 이후에도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추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유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림 II-1-3】 연령별 인구구조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및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2016: 3). 저출산 대책 평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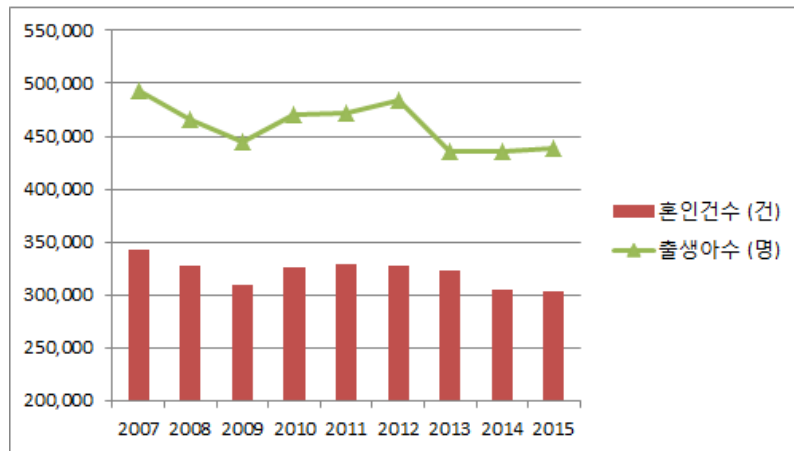


【그림 II-1-4】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국가통계포털 검색) 및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2016: 3). 저출산 대책 평가, 재구성.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방안인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도 [그림 II-1-4]에서와 같이 결혼 건수의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가 유사한 방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결혼문제 해결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림 II-1-5】 결혼 건수 및 출생아 수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국가통계포털 검색), 재구성

지금까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은 핵심 정책사안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혼여건 개선정책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 보육여건 개선 정책, 교육 여건 개선 정책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예산 지원은 2016년 기준 결혼지원 예산에 3,637,510백만원, 출산분야 지원 예산에 1,180,632백만원, 보육분야 지원 예산에 11,696,894백만원, 등록금 지원 등 교육예산에 4,221,715백만원, 일·가정 양립 분야 지원예산에 1,004,471백만원으로 정부는 21,741,222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2016: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에 따른 출산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개선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주로 결혼과 출산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결혼 연령으로 진입할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활동 등 결혼 진입단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인구절벽과 지역 격차

인구절벽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존립 문제에 해당하지만 보다 시급하게는 지역사회가 소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발달을 초래하게 되고,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들이 전승되지 못하게 된다.

2016년 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⁸⁾ 분포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주의단계에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로 인하여 일부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0년내에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됨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사회갈등 문제도 본격화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소멸 예상 지역 현황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 소멸위험 지수 0.1미만의 고위험 소멸지역 중에서도 상위 10개 지역으로 대부분 군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 단위지역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지만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 지방소멸위험도 상위 20개 지역 순위

순 위	지 역	노인	가임여성	위험지수
1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444	21	0.047
2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451	27	0.060
3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607	40	0.066
4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58	4	0.069
5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660	46	0.070
6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564	40	0.071
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658	48	0.073
8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1020	75	0.074
9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980	74	0.076
10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507	39	0.077

* 출처: 중앙일보(2017.9.6),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7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재구성.

8)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626&cid=43659&categoryId=43659>, 2017. 11. 30).

이러한 인구격차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변화의 중요한 요인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Hicks(1932)는 인구이동의 경제적인 차이, Lewis(1954)는 도시와 농촌의 절대소득 차이, Todaro(1980)는 도·농간의 실직소득 차이보다는 기대 소득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은우(2005)는 인구이동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동한 사람의 소득이 높으며, 강은택, 마강래(2012) 연구에서 비수도권에서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와 계속 거주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동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석, 서원석, 2014: 3 재인용).

또한 교육, 문화기반, 산업 및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이 지역간 인구격차 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송, 김석영(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인구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성우(2001, 2002)는 지역특성이 인구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김병성, 서원석(2014)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분석에서 사회문화 여건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함으로써 생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인구격차 해소 방안으로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김병석, 서원석, 2014: 1-14 재인용).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와 지역 격차의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인구절벽에 대한 정책들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단위의 결혼, 출산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었다면 보다 시급한 것은 인구이동과 분산문제 해결이다(박순창, 2012: 251-252).

특히 지역간 또는 지역내 소멸이나 인구이동 문제는 대부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층의 지역 정착 지원정책과 지역내에서의 노령층과의 관계 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인구절벽과 청소년문제

1) 청소년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는 표와 같이 청소년 인구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청소년인구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의 구성비까지도 감소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2010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11%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방추형의 형태로 바뀌게 됨을 의미하며, 지역 간에는 농촌의 경우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표주박형 형태를 이루게 된다.

표 II-3-1 총인구 및 청소년인구 추계(2010-2065) (단위: 명)

연 도	총 인 구	인 구 성 장 륜	청 소 년 인 구			
			전 체	남 성	여 성	구 성 비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2020	51,973,817	0.31	8,521,855	4,437,638	4,084,217	16.4
2025	52,609,988	0.20	7,491,892	3,873,864	3,618,028	14.2
2030	52,941,342	0.07	6,988,795	3,596,426	3,392,369	13.2
2035	52,833,722	-0.12	6,745,203	3,464,181	3,281,022	12.8
2040	52,197,882	-0.32	6,499,389	3,336,669	3,162,720	12.5
2045	51,051,159	-0.52	6,331,801	3,251,241	3,080,560	12.4
2050	49,432,752	-0.72	5,963,258	3,062,603	2,900,655	12.1
2055	47,429,589	-0.89	5,461,270	2,804,982	2,656,288	11.5
2060	45,245,985	-0.97	5,013,453	2,574,845	2,438,608	11.1
2065	43,024,097	-1.03	4,727,919	2,428,205	2,299,714	11.0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이 결과는 표의 학령인구 추계에서와 같이 초·중·고·대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표 II-3-2 학령인구 추계(2010-2065)

(단위: 천 명)

연 도	학교급별				
	계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010	9,950	3,280	1,985	2,084	2,601
2015	8,920	2,720	1,578	1,868	2,755
2020	7,823	2,725	1,359	1,383	2,356
2025	7,079	2,502	1,403	1,361	1,812
2030	6,806	2,417	1,228	1,322	1,839
2035	6,548	2,444	1,203	1,206	1,695
2040	6,400	2,356	1,223	1,209	1,613
2045	6,117	2,104	1,169	1,212	1,632
2050	5,645	1,892	1,034	1,117	1,602
2055	5,154	1,792	935	982	1,444
2060	4,798	1,708	891	913	1,286
2065	4,593	1,659	848	871	1,215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 사회의 생산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소수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출산율 향상이나 외국인 유입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으로 생각 볼 수 있는 것이 적정인구 규모 유지 정책과 더불어 생산인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질 좋은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 핵심 대상이 청소년이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소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문제의 총괄적 규모와 수준을 검토하고, 인구절벽 사회의 청소년문제 완화 또는 축소가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

청소년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2007년도 5,581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계치는 발생건수의 증가가 아니라 신고건수의 증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전히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관리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게 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이 건전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피해아동은 정서적 불안정, 학업문제, 생활습관 문제 등을 유발하게 되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지금까지의 개별 가정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연구결과 부모직업의 불안정성 등 사회구조 문제가 아동학대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황준수 외, 2016: 95-105).

표 II-3-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2008	5,578	422	683	284	2,237	57	1,895
2009	5,685	338	778	274	2,025	32	2,238
2010	5,657	348	773	258	1,870	14	2,394
2011	6,058	466	909	226	1,783	53	2,621
2012	6,403	461	936	278	1,713	0	3,015
2013	6,796	753	1,101	242	1,778	—	2,922
2014	10,027	1,453	1,582	308	1,870	—	4,814
2015	11,715	1,884	2,046	428	2,010	—	5,347

* 출처: 보건복지부(2016).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통계청 승인통계).

3) 위기청소년

(1) 청소년가출

가출 문제는 단순히 집을 나간다는 측면 보다는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국가차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최근 가출경향은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 장기 가출과 반복적 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144).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 가출경험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생의 2.9%, 중학생의 4.8%, 고등학교생의 4.7%정도로 전체 가출 비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표에 제시된 2015년 학령인구 수에 대비하여 보면, 초등생의 78,880명, 중등생은 75,744명, 고등생은 87,796명 정도가 되며, 초·중·고 전체 학령인구 대비로는 약 252,806명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3-4 청소년 가출 경험율

(단위: %)

구 분	초·중·고 학생가출 경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	4.1	5.7	5.3
2014	3.1	5.9	5.2
2015	2.2	3.8	4.2
2016	2.3	3.8	4

* 출처 : 김영지, 유선희(2016: 101)

(2) 학업중단

학업중단 문제는 청소년이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더불어 가출이나 비행 등의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3%, 중학교 0.6%, 초등학교 0.5% 수준으로, 초등학교는 조금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현상유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292).

이를 기준으로 학령인구대비 학업중단 규모를 산출해보면 초등학교는 13,600명, 중학교는 9,468명, 고등학교는 24,284명으로 초·중·고 전체대비 47,352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I-3-5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10	0.6	1.0	2.0
2015	0.5	0.6	1.3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여성가족부(2016: 292), 청소년백서 재인용.

4) 취약계층 청소년 증가

(1) 한부모 가정 청소년 및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 중 2008년 150만 가구에서 2015년 178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구대비 2015년 기준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가구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모자가정이고, 한부모 가정 중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구성도 2008년 15만 가구에서 2015년 23만 가구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최근의 이혼 증가, 미혼모의 증가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133). 이러한 결과는 인구절벽시대에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표 II-3-6 가구형태별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구 분	2008년	2012년	2015년
전체가구	16,792	17,951	18,705
한부모가구	1,509	1,677	1,783
구성비율	9.0	9.3	9.5
저소득한부모가구	150	218	230

* 출처 : 통계청(2016). e나라지표; 여성가족부(2016: 133), 청소년백서 재인용.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의2에서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 표에서 2015년도에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부모 아버지는 176명, 한부모 어머니는 303명, 20세-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부모 아버지는 4,874명, 한부모 어머니는 12,855명으로 전체 18,208가구로 집계되었다. 2017년 이후 자료는 이를 바탕으로 한 추산 통계이다.

이것은 2010년도 ‘장래가구추계’에서 추산했던 2015년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가 16,491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가 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추산보다 적게 발생했고, 20세-24세 이하는 추산보다 많이 증가했다(김지연, 2013: 17, 통계표 참조).

표 II-3-7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단위: 가구)

구분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30년도	2040년도
19세 이하	부+자녀	176	226	213	246	278
	모+자녀	303	330	247	143	86
20-24세	부+자녀	4,874	5,697	6,456	7,105	9,223
	모+자녀	12,855	13,574	13,437	10,468	10,614
계		18,208	19,827	20,353	17,962	20,201

*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 형태로는 주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외국인가족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을 보면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미취학 아동(58.8%)으로 추후 몇 년이내에 청소년계층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16: 134).

교육부(2016.3.9.)의 2016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학생대비 다문화 학생비율은 2010년도의 0.44%에서 2015년 1.35% 수준이며,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수는 82,536명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와 더불어 생산인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3-8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만 6세이하	만 7~12세	만 13세~15세	만 16세~18세
2007년	26,443	14,392	2,080	1,341
2010년	75,776	30,587	8,688	6,884
2013년	116,696	45,156	18,395	11,081
2016년	116,068	61,625	12,567	7,290

* 출처 : 행정자치부(2016).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여성가족부(2016: 134). 청소년백서 재인용.

(3) 요보호 청소년

요보호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국가는 요보호아동시설 입소나 입양 및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IMF이후 경제악화에 의해 매년 1만명 이상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5천명 이내 수준으로 낮아졌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으로는 아동학대 21.9%로 가장 높고, 부모이혼 21.5%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모 출산 아동도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18세 이전에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자기 역량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3-9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아동학대	부모이혼 등	미혼모 아동	기타사항
2000년	15,936	—	—	4,190	11,746
2005년	18,468	—	—	2,638	15,830
2010년	9,960	1,037	2,015	2,804	4,104
2015년	4,975	1,094	1,070	930	1,881

* 출처 : 보건복지부(2015).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여성가족부(2016: 137). 청소년백서 재인용.

(4) 청소년 고용과 실업

인구절벽시대의 청소년고용과 실업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취업자는 2015년 기준 166만6천명으로 고용율은 26.9%수준으로 전체 고용율 60.3%보다 매우 낮다. 전체취업자 중에서 청소년취업자는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취업자 수는 2002년 9.5%이래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의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다. 남녀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2015년 여자 청소년이 34%이고, 남자 청소년은 25.9%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참가율이 낮은 것은 군 입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여성가족부, 2016: 338-343).

표 II-3-10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2005	2010	2012	2015
경제활동인구	2,034	1,525	1,626	1,862
경제활동참가율	33.3	25.5	26.6	30.1
남자	26.7	20.2	22.1	25.9
여자	39	30.4	30.9	34.0

* 출처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가족부(2016: 338), 청소년백서 재인용.

또 다른 근로형태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가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의 생활비나 부채 또는 나의 부채’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 주방이나 서빙이 38.1%로 가장 높고, 매장관리·판매가 32.3% 높게 나타나 후기청소년의 일자리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53).

다음으로 청소년의 실업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측면에서 각종 고용촉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실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 실업자는 2015년 19만6천명, 실업율은 10.5%로써 전체실업을 3.6%에 비하여 2.9배 높다. 청소년의 연령계층별로는 20~24세 청소년의 실업율이 11.5%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실업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345-347).

표 II-3-11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율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2005	2010	2012	2015
청소년실업자 수	208	150	146	196
청소년실업율	10.2	9.8	9.0	10.5
남자	12.3	11.2	9.7	11.3
여자	9.0	9.0	8.5	10.0

* 출처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가족부(2016: 345), 청소년백서 재인용.

(5)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나 범죄연령의 저연령화, 범죄유형의 흉포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가 제기되고 있다(김혜정, 2012: 134,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3).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문제는 만성적인 행동 문제로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경민 등은 초등학교 1학년대상으로 6-8년간 종단연구를 한 결과 청소년비행 행동은 개인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으며, 6-8년후 비행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절벽시대에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의 선별가능성을 보여준다(신경민, 2010;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42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 및 학생범죄 경향을 보면 <II-12>에서와 같이 2015년기준 소년범은 71,063명으로 전체범죄의 3.5%수준이다.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자의 구성은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범죄의 구성비는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교중심의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표 II-3-12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2005년	1,965,571	67,478	3.4	43855	65.0
2008년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11년	1,907,641	83,068	4.4	57,672	69.4
2015년	2,020,731	71,035	3.5	58,473	82.3

* 학생범죄자는 2008년까지는 7세이상19세이하, 2009년부터는 7세이상 18세이하 소년범만을 대상으로함.

* 출처 : 대검찰청(2006-2016), 범죄분석; 경찰청(2006-2016), 경찰범죄통계, 참조 재구성.

또한 소년범죄의 중요한 경향은 범죄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2013: 56-57) 연구에 따르면, 14-16세까지의 소년 범죄가 매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서도 과거에는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반면에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 방안으로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랑의 교실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학교담당 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일반학교 부적응 대안교실 운영, 청소년비행상담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범죄의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연령대별 개입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인구절벽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2016년 저출산 예산은 21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존립 문제이고,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문제라고 볼 때,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출산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4-1 분야별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저출산 대책 예산	2016 예산	계수적용예산	차액
혼인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강화	3,637,510	2,276,019	1,361,491
출산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80,632	684,382	496,250
보육	맞춤형돌봄확대	11,696,894	8,583,639	3,113,255
교육	교육개혁	4,221,715	2,899,154	1,322,561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004,471	823,055	181,416
합 계		21,741,222	15,149,267	6,591,955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2016). 저출산 대책 평가.

새롭게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단순히 소득수준 중심의 지원 정책 이외에도 대상 청소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단순히 생산가능인구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 가능성과 문제완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저하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 III 장

인구절벽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교육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2. 노동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3. 복지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제 III 장 인구절벽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⁹⁾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제시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노동복지 체계를 청소년정책에도 수렴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교육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정책의 현황분석

유럽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60여 년간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1950년에 20억 5천명이던 것이 2015에는 70억 3천에 이르렀다. 206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무려 100억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증가는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전체 인구의 증가와는 달리 유럽연합, 한국, 일본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구변화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E2%80%93_who_are_we_and_how_do_we_live%3F).

이와 비슷한 심각한 인구절벽과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언론보도에서도 이미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례로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

9) 제3장의 1. 1)은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고, 1. 2)와 2.는 강지명(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이 집필하였으며, 3.은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0001064972), 2017년에는 그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하한선으로 지키고자 했던 40만 명보다 못한 36만 명에 그쳤다. 2006년부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100조원 이상 투자했지만 효과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되 현장 중심으로 정부의 세심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실시 중에 있다. 더 나아가 2018년 2월 7일에는 저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국회포럼 1.4’가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입법 활동을 위한 창립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출산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 ‘국회포럼 14’는 향후 5년을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표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출산대책과 재원확보마련 방법에 대하여 강구할 것을 선언하는 등, 국가 사회적으로 인구절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면 대규모 인구집단의 소비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며 대한민국은 이미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절벽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속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 로봇의 현실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갈등의 문제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00년대 이후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고자 청소년정책을 공공영역에서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종합 대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표 정책 중의 하나인 Europe 2020과 청소년정책중의 하나인 EU Youth Strategy 모두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 노동력 부족, 사회부양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Commission, 2016)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제시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특히 제4차, 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2012~2017)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및 관련 청소년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청소년관련 문제 중의 하나로서의 인식일 뿐 인구절벽과 관련한 청소년역량 강화와 청소년지원에 관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인구절벽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준비의 부족과 사회적 논의의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정책에도 인구절벽과 관련된 정책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기본법과도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 정책의 현황분석

(1) 인구교육정책의 연혁

청소년 인구교육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으로 마련된 보육정책과 복지정책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이 강조된 정책이라면 인구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교육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225~228)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동위원회는 2005년 5월 18일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동법에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2007년에는 학교현장에서 재량활동시간 및 정규 교과과목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가 개발’되었다.

윤인경 외(2006: 3)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의 방향과 학교교육의 목표 및 내용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학교교육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구체적으로 인구교육을 학교교육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학생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탐구학습 및 실습·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록 구성하여 재량활동시간 및 정규 교과과목 시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보건 복지부, 2007: 4). 동 연구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대응 방안 등’, ‘가족의 다양성·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국제결혼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적인 가치관 함양’,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개인과 사회적 역할’ 등이 내용으로 담겨졌으며, 개발된 교재는 학교에서 재량활동용 인정도서로 승인받아 학교에서 정식교과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후 2008년 ‘고등학교용 인구교육교재 및 지도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인구교육담당교사에 대한 사이버연수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2010년에는 ‘대학인구교육교재’, ‘학교인구교육지침서’가 개발되었다. 2011년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최근 201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연구’가 이루어졌다. 2007~2010에 걸쳐 마련된 초중고대학교교재개발 이후 실시된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실태조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인구교육을 학교에서 받는 학교인구교육과 그 외의 주부, 회사원, 군인, 공무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인구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학교 인구교육실태조사는 행정기관인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학교 및 교원, 학생을 포함하였고 사회 인구교육실태조사는 지방자치 단체와 각종 민간사회단체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원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 실태조사에서 인구교육은 출산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 인식되었다(김태헌 외 8인, 20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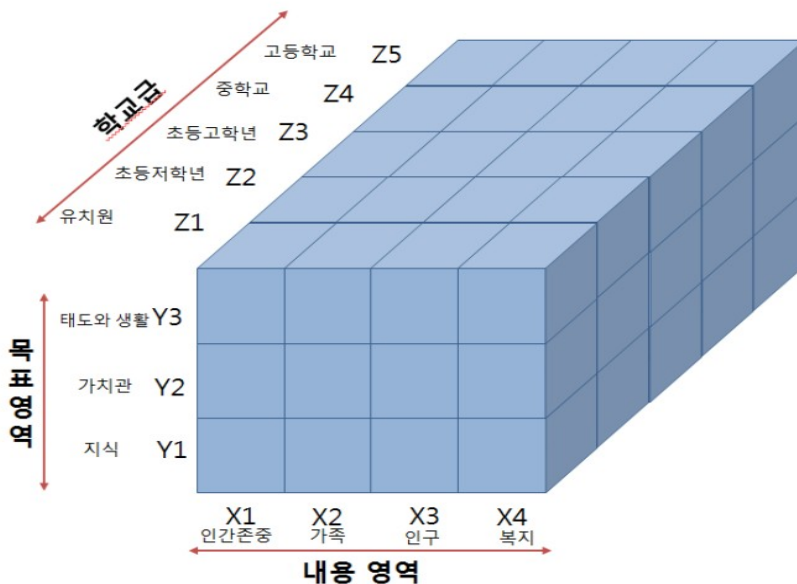
(2) 인구교육정책의 현황

2015년 이전의 인구교육정책이 학교급별 교과교육과정에 녹아들지 못하고 별도의 재량수업을 통하거나 일반시민에 대한 교양수업을 통한 인구교육을 마련하였다면, 2015년 이후의 인구교육 정책을 위한 정책마련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교육정책을 준비하였다. 즉, 별도의 재량수업을 통한 인구교육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내에서 인구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윤인경 외(2015: 24)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 대상(9-24세, 초중고대학)인구교육의 내용은 [그림 III-1-1]과 같이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가 한 축을 담당한다. “인간과 가족 친화적 삶을 영위하고 인구 적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존중, 가족, 인구,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윤인경 외, 2015: 24)”을 인구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인구교육 관련 선행 연구 고찰하여 저출산고령 사회 동향과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으며, 국내외 학교 인구 교육 관련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과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분석(도덕, 사회, 기술가정 등)하였는데, 외국의 교과서 내용 분석을 하기도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 인구교육의 개념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급별 인구교육의 목표를 체계화하여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학교 인구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그림 III-1-1】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모형

* 출처: 윤인경 외(2015: 24)

인구교육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설정하고 인구교육 내용 요소를 설정하여 학교급별 인구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과별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교수학습 지도안

예시한 것이 실효적이다. 도덕(초등 및 중등), 사회(초등 및 중등), 실과(초등), 기술가정(중등), 기타 교과(국어, 영어, 예체능 교과 등)교과목의 수업안이 마련되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재개발과 실태조사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내용마련과 보급이 실질적인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학생청소년을 전제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인구절벽현상에 따른 인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인구교육과정의 일반시민교육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소년대상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노동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의 현황분석

(1)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의 적용연령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정책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의 하한연령에 대한 정책에서부터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근로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만 가능하다. 즉,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15세 미만으로, 이것은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일할 수 없으므로, 중학생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학업과 청소년근로보호

학업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시기의 근로를 보호해왔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에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업체가 부설하여 설립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산업체 부설학교라고 하는데 요즘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는 다른 점은 회사 측에서 마련한 학교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일을 하면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부설 학교는 없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3년 4월 기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써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계·전자통신·자동차·모바일·조선·항공·전자·에너지 등의 20개의 유명 분야를 해당 학교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면제되며, 장학금, 기숙사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학생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복무 시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군복무 중 e-Military University제도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마이스터고 홈페이지, 2018.1.20.검색)”

현장실습에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실습을 받을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실습을 나가려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1호, 2015. 5. 18, 발령·시행)”를 작성해야 한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유해근로환경과 청소년근로보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등을 시키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밖에 갯내근로도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은 갯내(坑内)에서 일할 수 없는데,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갯내근로가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갯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갯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갯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갯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다. 이때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2:12) 갱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정해져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위의 1. 부터 ~ 4.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 1) 숙박업(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단,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단,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그리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가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3)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0.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단,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11.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단,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주와 사용자에게는 주의의무가 부가되는데, 먼저 취업을 하려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의 의무가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8조 제4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8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업주 또는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 제8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 본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출입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 제9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4) 청소년근로보호와 직업소개사업

청소년에 대한 직업소개사업도 제한을 받는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청소년의 연령 및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소개사업자(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업소개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직종의 업소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5) 15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보호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청소년 포함)은 일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59조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때,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즉,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자 및 후견인의 서명은 필요하다.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취직인허가에 관련된 절차가 있더라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취직인허증의 발급자체가 금지되는 직종이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제59조 제6호 및 별표 4).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 청소년의 근로가능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 이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내어준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만, 특정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 가능시간 적용에 예외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근로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년 고용정책의 현황분석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구체적인 청년 고용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정책의 적용을 받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는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일학습병행제’ 및 ‘직무중심(NCS 기반 능력중심)채용확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일자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과 ‘재학생직무체험프로

그럼'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해외취업지원'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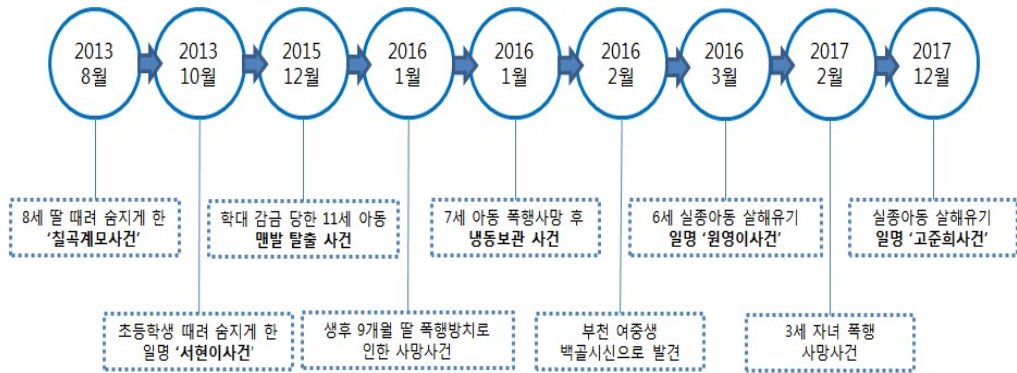
인구절벽시대 청년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도의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세대간의 상생고용노력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모든 기업(공공기관포함)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정책'과 '청년허브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청년수당정책은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서(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전입 되어 있는 경우, 만19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다른 청년고용지원정책은 '청년허브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허브는 서울시와 연세대가 공동운영하고 있다.

3. 복지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현황분석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우리사회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장래 사회발전을 담당하게 될 인적 자원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물론 과거에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맞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이 인정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인권의식의 발달과 폭력의 비윤리성에 대한 자각이 강해짐에 따라 더 이상 우리사회가 아동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유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천인공노할 학대사건들이 드러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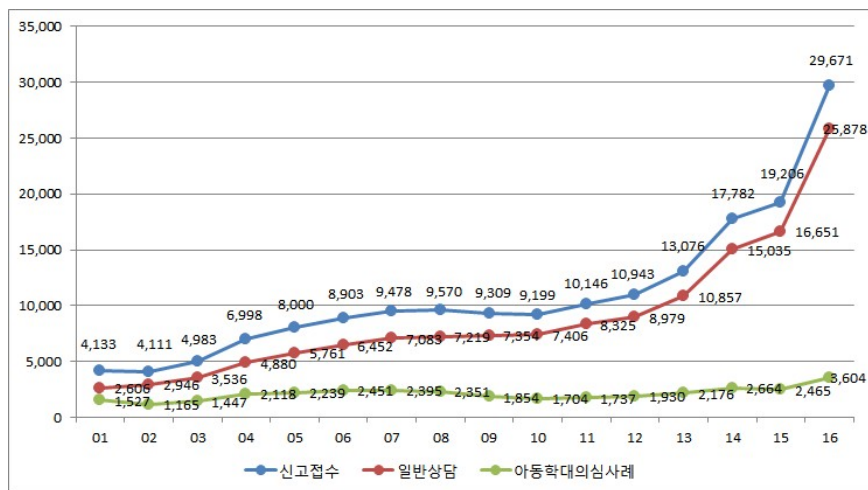
【그림 III-3-1】 이슈로 보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 출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1)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먼저 2013년 10월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민간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그 후 정부는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2014. 2.28일). 아동학대 대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는데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시행과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홍보를 시행하며, 둘째,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사건발생즉시 경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관련 NGO 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경찰관서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상담, 치료 명령제를 도입하였다(이은주, 2015: 73-75).

2016년에는 다시 한 번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구하였다. 또한 장기결석

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 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도 추가되었다. 일선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배치하고 학대전담경찰관도 배치함과 동시에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등, 2016:3-4). 2017년 아동학대 대책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아동학대 대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도참고자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책 발표 이후 학대신고는 54% 증가, 현장조사도 50% 이상 증가, 경찰동행은 86%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을 더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 것, 또 전국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보건복지부 등, 2017:2-3).



【그림 III-3-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학대 통계”(http://www.korea1391.go.kr/new/page/sts_report.php, 2018.2.1.)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상담건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면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민감성 증가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 공적 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시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표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구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개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가중처벌하고, 신고자의 신고의무 강화와 불이익조치 강화,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 피해아동 보호명령제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부모 등의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모에 대한 양육교육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아동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이만우, 2016: 1).

표 III-3-1 아동학대 관련법의 내용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제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개정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 • 가해부모에 대한 법원명령의 치료·상담·교육수강제도 도입 •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선임 특례 •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설
2011년~2016년	아동복지법	• 매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10년간 취업제한 •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금지 • 보호대상아동의 사전 조사, 상담 기능 강화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17: 103). 제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재구성.

최근 몇 년 동안의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내용은 우리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서 그 핵심을 밝혀낼 수 있다. 지난 해 제출된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의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3항, 제39조)”에 따르면, 첫째,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확대하였고, 둘째, 지역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아동보호기관 증설과 아동보호 전문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아동학대 현장출동체계 마련,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연계,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기소방안 마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공판, 수감명령의 필요적 병과 구형 등 엄정한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넷째,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하여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 관련법 제, 개정,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17:37-42).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조기발견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등을 보완해야할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등, 2017: 6).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우리나라 청소년 중 위기를 경험하거나 위기에 빠질 청소년의 규모와 유형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의 하나인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2016년도 조사에서는 전국의 일반학생 83,533명과 위기청소년 6,46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과 위기행동 실행부 등을 묻고 있다.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목표의식, 가족의 관심과 지지,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과 지지,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의 공격성과 충동성, 부모와의 갈등, 부부간 갈등, 비행친구,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조사되었고, 위기행동으로는 인터넷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비행, 학대,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직장부적응이 조사되었다. 결과를 보면 일반학생의 2.24%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위기취약청소년 중에는 13%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황순길 외, 2016:23). 이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비행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피해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차례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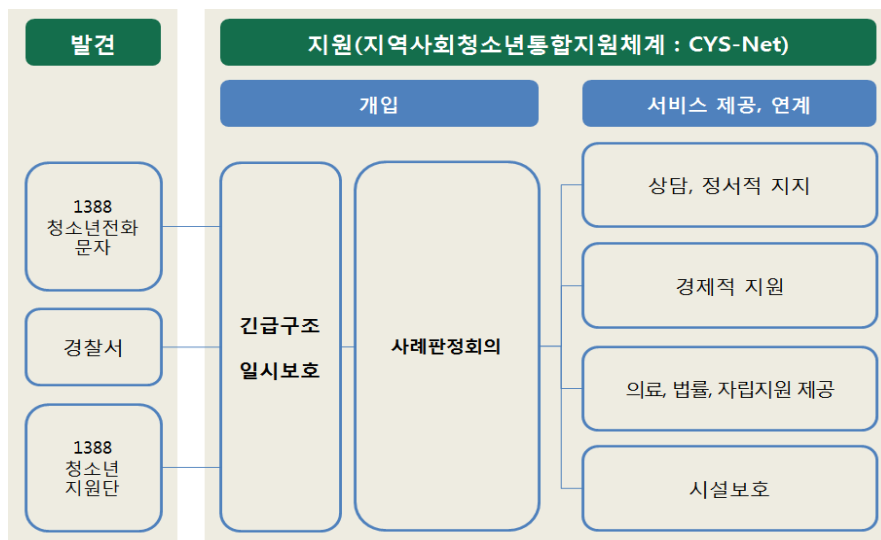
먼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한번 연장가능하고 학업 및 자립지원은 두 번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3-2 위기청소년 지원종류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연간 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재구성(http://www.mogef.go.kr/mp/pod/mp_pod_s001d.do?mid=plc502, 2018.1.18.)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운영하고 있다. CYS-NET은 9-24세의 청소년과 그 가족이 모두 이용가능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면상담, 1388 청소년상담, 청소년 동반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보호소를 통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YS-NET 체계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Ⅲ-3-3】 위기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운영 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서비스, 청소년(보호), '위기청소년 상담복지지원(CYS-Net) 운영', 재구성.
(http://www.mogef.go.kr/cs/ypr/cs_ypr_f001.do, 2018.1.26.)

가출청소년 쉼터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뉘어져 있는 쉼터에서는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상담심리치료, 사회복귀 자립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 및 학교복귀, 또 상급학교 진학 등을 지원하고 거리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전국에 123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을 연구한 전경숙(2012:9-10)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다수가 5회 이상의 반복적 가출, 거리배회, 노숙 등을 경험하며, 생계형 범죄로의 유입가능성이 크고, 감독과 통제의 이유로 쉼터 이용을 꺼리고, 가정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여 현재의 자립지원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5년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비율은 40%미만, 해당 지역센터로 연계된 비율은 17.5%, 청소년쉼터를 통한 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도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관계기관들 간의 업무연계가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성윤숙, 2016: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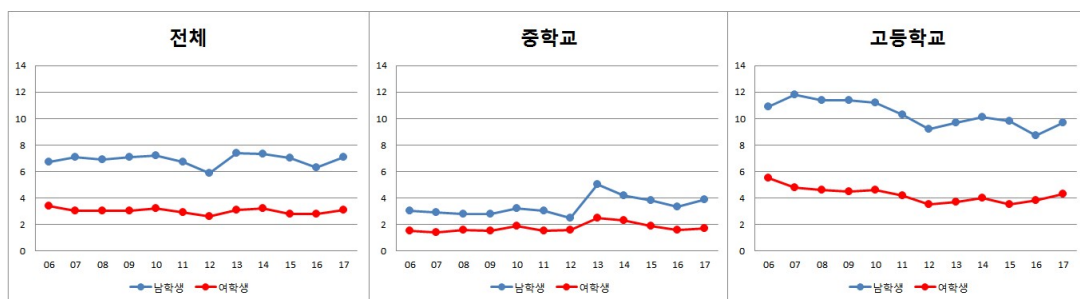
황순길 외(2016:166-168)는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정책제언에서 그동안 정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이 고위험군 청소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잠재적 위험군이나 경계선 상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다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또 위기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연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정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문제유형별, 위기수준별, 성별, 학교 급별, 지역별 위기문제에 대해 통합적, 체계적,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오랫동안 위기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예방방안 등에 대한 고민들 해오고 있고 법률 제정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전문 인력과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위기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들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정책의 현황분석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그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는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회규범을 어긴 비행이나 일탈로 치부하였으며 사회규범의 강제력이 상당히 커서 청소년의 성과 더 나아가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백혜정 외(2012:33)도 “청소년의 성경험이나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임신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성인식과 성행동

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성 경험률은 2006년에 6.7%였던 것이 2017년에는 7.3%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성 경험률은 3%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3-4 > 참조). 성관계시 피임 실천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증가하였지만 남녀 청소년 모두 50%내외에 머물고 있다.



【그림 III-3-4】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6-2017)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p.26에서 재구성.

표 III-3-3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실천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전체	2,860	42.3 (1.0)	3,172	36.0 (0.9)	2,930	43.6 (1.0)	2,653	48.7 (1.0)	2,287	51.9 (1.0)	3,033	49.9 (0.9)
남학생	2,025	42.8 (1.1)	2,266	38.5 (1.1)	2,050	44.1 (1.3)	1,962	48.6 (1.2)	1,616	52.0 (1.0)	2,119	49.7 (1.1)
여학생	835	41.1 (1.7)	906	40.5 (1.7)	880	42.2 (1.7)	691	48.8 (1.9)	671	51.8 (2.1)	914	50.4 (1.8)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p.337에서 재구성.

2016년 제12차 조사에서는 임신중절수술 경험률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전체 여학생 중 임신경험이 있는 0.2%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 80% 이상이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표 III-3-4 인공임신 중절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분석 대상 자수	분율 (표준 오차)
여학생	37,737	0.2 (0.0)	35,942	0.2 (0.0)	35,729	0.2 (0.0)	35,528	0.2 (0.0)	32,793	0.2 (0.0)	31,681	0.2 (0.0)
임신경험 여학생	111	83.4 (3.8)	95	81.6 (4.0)	78	66.1 (5.2)	74	71.6 (5.0)	68	73.6 (5.2)	78	81.0 (5.1)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2016)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p.301에서 재구성.

여자청소년의 피임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재영, 2017: 259-267)에서는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743명의 여자청소년을 추출하여 분석한 바, 이들 중 34%만이 피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이른 나이의 성경험과 음주 후 성관계였다. 즉 성경험이 이르거나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피임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연시키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가?는 논쟁거리이며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권을 보호하여 출산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백혜정 외(2012:34-41)는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으로 높은 미혼모비율, 높은 비율의 낙태와 입양, 양육모의 증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높은 비율의 학업중단, 가족 등 지지체계의 단절, 불안정한 주거환경,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발달적 문제발생 가능성 증가 등을 제시하고 청소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정책은 위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이후 최근의 정부의 정책들은 전문가들의 제언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조항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35-36).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2018. 1. 16일자로 신설된 규정을 통해(제17조의 2의 ④항)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3-5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급 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17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3에서 재구성.

김지연(2013: 9)은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크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자기결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는데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청소년기의 재생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성차별,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연령과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또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의 지원이 자립에 충분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나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청소년의 한부모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 IV 장

전문가 의견조사¹⁰⁾

1. 조사개요

1) 대상과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인구절벽이나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이다. 학계 전문가 10명, 공무원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총 3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학계 전문가는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회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전문가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고, 조사대상자 30명 전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조사에 참여한 3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원이 응답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나 심층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차 조사 결과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고, 2차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SPSS/WIN(ver.20.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10) 제4장은 이유진이 집필하였음.

표 IV-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직업	직위	성별	연령 (세)	재직기간 (년)	조사참여		분야구분
						1차	2차	
1	대학교	교수	남	48	18	○	○	학계
2	대학교	교수	여	56	21	○	○	
3	대학교	교수	남	51	23	○	○	
4	대학교	교수	여	50	25	○	○	
5	대학교	교수	여	48	8	○	○	
6	대학교	교수	남	55	20	○	○	
7	대학교	교수	남	55	22	○	○	
8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여	40	12	○	○	
9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여	47	10	○	○	
10	국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여	41	5	○	○	
11	여성가족부	과장	남	49	13	○	○	공무원
12	여성가족부	과장	남	52	25	○	○	
13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여	39	15	○	○	
14	보건복지부	사무관	남	57	9	○	○	
15	교육부	사무관	남	45	16	○	○	
16	교육부	사무관	남	32	4	○	○	
17	법무부	소장	남	57	32	○	○	
18	법무부	과장	남	48	17	○	○	
19	경찰청	경위	남	49	20	○	○	
20	국회	조사관	여	49	9	○	○	
21	민간단체	사무총장	남	49	25	○	○	현장
22	민간단체	회장	남	44	18	○	○	
23	민간단체	회장	여	54	15	○	○	
24	민간단체	관장	여	53	17	○	○	
25	민간단체	소장	여	53	20	○	○	
26	민간단체	팀장	남	49	23	○	○	
27	민간단체	노무사	여	44	12	○	○	
28	고등학교	교장	남	60	37	○	○	
29	고등학교	교사	남	43	21	○	○	
30	고등학교	교장	여	57	30	○	○	

2) 내용과 도구

1차 조사의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첫째는 인구절벽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나 현행 정부의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세부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청소년정책 사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해야할 부처,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변화 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둘째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이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과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셋째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이다.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과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넷째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이다. 아동학대 대책과 가출, 성매매, 비행 등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청소년 임신, 출산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2차 조사는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2차 조사의 조사도구는 1차 조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선택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의 큰 틀은 1차 조사와 동일하고, 세부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고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 문항 중에서 2차 조사의 형식과 맞지 않거나 이미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되었던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한 1차 조사 문항으로 “Ⅰ. 인구절벽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중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과 “Ⅱ.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중 1-3문항은 1차 조사 결과만으로 분석하였다.

11) 1차 조사 질문지 개발을 위해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4: 55); 신윤정, 김윤희(2012: 165); 신윤정, 박종서, 김은정, 이재량, 최인선(2014: 242); 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2014: 171-177); 이삼식, 최효진(2014: 116); 이소영, 최인선(2014: 141-145).

2. 조사결과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변화에 관한 의견

(1)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관계 분석

가. 청소년정책의 인구대책 기여 가능성

출산력을 높임으로써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면, 생산가능인구를 15세~64세로 정의할 때, 적어도 15년~2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이후에 질문한 교육, 노동,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한 문항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대동소이하여 2차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이 영역별 과제와 중복되므로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다만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바라고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한편, 10년 후, 20년 후, 청소년인구가 급감한 미래사회에서도 청소년정책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청소년정책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인구가 줄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대부분(27명)이었다. 하지만 3명의 전문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은 없었으나, 인구 급감으로 정책 비중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인구규모 축소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청소년 이용시설의 융복합화를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나.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에 대한 의견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복합혁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서도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만약 이 체계에 동의한다면 기존의 청소년정책 분야를 이 세 가지 체계에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분류하고, 이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되어야 할 정책분야가 무엇인지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26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서도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체계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렴할 수 있고, 노동 체계에는 청소년보호정책 중 근로보호정책을 수렴할 수 있으며, 복지 체계에는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4명의 반대의견도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노동, 복지 체계 속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이와 별도로 청소년정책은 따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 청소년정책의 인구관리에 관한 의견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세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구의 양적 관리 측면에서 청소년이 미래의 인구재생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구의식을 강화(인구의 중요성 강조, 이성교제 및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육 등)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하는 정책이고, 둘째는 인구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강화(청소년활동의 강화, 아동학대 대책, 위기청소년 지원 등)와 청소년의 근로활동을 관리(연소자 노동인권 강화 등) 하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19명의 전문가가 이러한 관점에 찬성하였고, 반대하는 전문가 7명, 무응답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의 세부의견을 보면, 이성교제나 결혼, 출산 등은 국가가 나서서 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과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바라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라. 현행 인구대책 중 청소년 관련 정책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아동, 청년 포함) 관련 정책과 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었으나 주로 정부부처 정책들이 언급되었다.

표 IV-2-1 현행 인구대책 중 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교육	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 청소년체험활동(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부), 두드림학교(교육부), 방과후학교(교육부), 한부모가정반편견교육(한부모가정사랑회)
노동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여성가족부), 청년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아동친화기업인증(고용노동부), NCS기반 학교-직업훈련(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년보호협회 직업훈련교육 및 창업보육(법무부), 청년창업펀드(서울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활동(대구시)
복지	가출청소년자립지원(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성가족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교육부),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퇴소아동자립지원(보건복지부), 아동친화도시인증(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한국소년보호협회 희망하우스 및 미혼모지원(법무부), 위기청소년발굴 팀터(군포시), 인터넷중독예방(한국인터넷진흥원), 학교폭력예방(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정사랑회),

마. 부처간 협력

향후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처들이 협력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17건)와 교육부(16건), 여성가족부(14건), 고용노동부(14건), 법무부(7건), 문화체육관광부(7건), 행정안전부(6건), 국토교통부(4건), 기획재정부(4건) 등이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부처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2건)와 중소벤처기업부(2건), 국방부(2건), 통일부(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해양수산부(1건), 외교부(1건) 등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2건)나 국가인권위원회(1건), 일자리위원회(1건), 금융감독원(1건) 등도 기타의견으로 언급되었다.

표 IV-2-2 협력이 필요한 부처(다중응답)

부처	응답건수	부처	응답건수
보건복지부	17	산업통상자원부	2
교육부	16	중소벤처기업부	2
여성가족부	14	국방부	2
고용노동부	14	통일부	2
법무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1
행정안전부	6	해양수산부	1
국토교통부	4	외교부	1
기획재정부	4	기타	5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분석

가.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 등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청소년학과 등 전문가집단 존재’가 2순위,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등 활동정책 인프라 구축’가 3순위,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관심’이 4순위, ‘다양한 부처에서 폭넓게 청소년정책 추진’이 5순위, ‘정책대상이 2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포함’이 6순위, ‘지식전달보다 역량증진의 중요성 높아짐’이 7순위, ‘사회 내 청소년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이 다양함’이 8순위,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개입반응성이 높음’이 9순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순위와는 달리 각 문항에 대한 1순위 비율의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부처에서 폭넓게 청소년정책 추진’이 31.0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관심'이 25%, '청소년상담사,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 등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이 24.14%, '청소년상담사,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 등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식전달보다 역량증진의 중요성 높아짐'이 동일하게 1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순위	강점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상담사,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 등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3.38	24.14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청소년학과 등 전문가집단 존재	3.71	—
3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등 활동정책 인프라 구축	4.26	11.11
4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관심	4.61	25.00
5	다양한 부처에서 폭넓게 청소년정책 추진	4.72	31.03
6	정책대상이 2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포함	5.54	—
7	지식전달보다 역량증진의 중요성 높아짐	6.00	11.11
8	사회내 청소년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이 다양함	6.11	—
9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개입반응성이 높음	6.15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청소년 정책의 내부적 약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정책 중에서 낮은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이 1순위, '청소년정책의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음'이 2순위, '콘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이 3순위, '19세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림'이 4순위,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이 5순위,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 발생'이 6순위,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가 7순위,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대상이 아님'이 8순위,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9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유로는 '청소년정책의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음'이 31.03%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 중에서 낮은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이 24.14%, '19세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림'이 21.43%, '콘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이 10.34%,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가 7.41%,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가 7.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약점

	약점	평균	1순위 비율(%)
1	정부 정책 중에서 낮은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	2.66	24.14
2	청소년정책의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음	3	31.03
3	컨트론타워 부재로 부처간 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	3.52	10.34
4	19세 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림	4.14	21.43
5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4.21	7.14
6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 발생	5.68	—
7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	6.22	7.41
8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대상이 아님	7.33	—
9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	7.96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다.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주목’이 1순위, ‘청소년문제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가 2순위, ‘인구자질 향상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가 3순위,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이 4순위, ‘자원 집중도 증가로 양질의 초점화된 청소년 지원 가능’이 5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강화활동증가’가 6순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 제고’가 7순위,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외국 유학생의 유입증가’가 8순위, ‘경쟁문화 완화 및 완전고용 가능성 증가’가 9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주목’이 24.14%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 집중도 증가로 양질의 초점화된 청소년 지원 가능’이 21.43%, ‘청소년문제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가 17.24%,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강화활동 증가’가 11.11%, ‘인구자질 향상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가 10.71%,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

제고'가 7.41%,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이 7.14%,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외국유학생 유입의 증가'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

	기회요인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주목	2.97	24.14
2	청소년문제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3.52	17.24
3	인구자질 향상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4.14	10.71
4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4.54	7.14
5	자원 집중도 증가로 양질의 초점화된 청소년 지원 가능	4.82	21.43
6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강화활동 증가	4.93	11.11
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 제고	6.04	7.41
8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외국 유학생의 유입 증가	6.52	3.7
9	경쟁문화 완화 및 완전고용 가능성 증가	7.15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라.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협요인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가 1순위, '고령인구 부양 및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간 갈등 심화'가 2순위, '일자리 축소 및 인공지능과의 경쟁으로 청소년의 무력감 심화'가 3순위, '예산 및 사업 등 청소년정책 규모의 축소'가 4순위,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가 5순위, '계층 양극화로 소수의 청소년 기회독점'이 6순위, '청소년 전문인력의 감소'가 7순위, '청소년에 대한 관심 감소 및 부정적 인식'이 8순위, '생식보건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 증가'가 9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가 35.7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고령인구 부양 및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간 갈등 심화'가 27.59%, '예산 및 사업 등 청소년정책 규모의 축소'가 17.24%, '계층 양극화로 소수의 청소년 기회독점'이 7.41%,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가 7.14%, '청소년 전문인력의 감소'가 3.7%, '일자리 축소 및 인공지능과의

경쟁으로 청소년의 무력감 심화'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험요인

	위험요인	평균	1순위 비율(%)
1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	3.21	35.71
2	고령인구 부양 및 일자리에 대한 세대간 갈등 심화	3.34	27.59
3	일자리 축소 및 인공지능과의 경쟁으로 청소년의 무력감 심화	3.86	3.45
4	예산 및 사업 등 청소년정책 규모의 축소	4.41	17.24
5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	4.46	7.14
6	계층 양극화로 소수의 청소년 기회독점	5.78	7.41
7	청소년 전문인력의 감소	6.26	3.7
8	청소년에 대한 관심 감소 및 부정적 인식	6.59	—
9	생식보건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 증가	6.67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이 2순위,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취약'이 3순위,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이 4순위,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역량강화 활동 미흡'이 5순위,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이 6순위, '인구절벽 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가 7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활동 취약’이 8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32.1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이 28.57%, ‘인구절벽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가 14.29%,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이 10.43%,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역량강화활동 미흡’이 7.14%,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취약’이 6.9%,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	2.82	32.14
2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	3.61	28.57
3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취약	3.97	6.9
4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	4.21	10.34
5	이성교제와결혼,출산,양육에관한역량강화활동미흡	5.04	7.14
6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	5.22	3.7
7	인구절벽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	5.25	14.29
8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활동 취약	5.29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등 인프라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났고,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2순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양성을 통해 입시위주교육제도 개혁’이 3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활동 활성화’가 4순위,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가 5순위,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가 6순위,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가 7순위,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가 8순위,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현상에 특화된 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9순위, ‘지역별 총과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이 10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28.5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역량기반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양성을 통해 입시위주교육제도 개혁’이 17.86%,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17.24%,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와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가 동일하게 11.11%,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가 7.41%,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가 7.14%,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가 3.7%,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현상에 특화된 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3.69	17.24
2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4.18	28.57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양성을 통해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4.39	17.86
4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5.29	7.14
5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	5.3	11.11
6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	5.56	11.11
7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5.63	3.7
8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활성화	5.81	7.41
9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 현상에 특화된 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18	3.57
10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	6.96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다.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관한 의견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중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4인, 2014: 55)를 통해 도출된 5가지 핵심역량과 16가지 하위역량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핵심역량 중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다음으로 생활관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이 각각 10건, 대인관계역량 7건, 생애학습역량 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하위역량 중에서는 진로설계와 공동체 시민성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다음으로 개척정신이 7건, 건강관리가 5건,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이 각각 4건, 지적도구 활용 및 관계형성과 협동이 각각 3건, 사고력 2건, 과제관리 및 세계 시민성이 각각 1건씩의 순으로 이어졌다.

표 IV-2-9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중요도(다중응답)

핵심역량	응답건수	하위역량	응답건수
생애학습역량	4	사고력	2
		지적도구활용	3
		학습적응성	—
생활관리역량	10	건강관리	5
		과제관리	1
		상황대처	4
		정서조절	4
진로개발역량	17	진로설계	10
		여가활용	—
		개척정신	7
대인관계역량	7	관계형성	3
		리더십	—
		협동	3
사회참여역량	10	개인 시민성	—
		공동체 시민성	10
		세계 시민성	1

*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항목 출처 : 성은모 외 4인, 2014: 55

제시된 역량들은 청소년에게 모두 중요한 항목들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노동인력 감소나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진로개발역량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위영역에서 진로설계와 공동체 시민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이 1순위로 나타났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이 2순위,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1회성 형식적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구관련 교육과정 부재’가 4순위,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교육인지 의식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이 5순위,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이 6순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음’이 7순위,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이 8순위,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1순위 비율로는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이 29.6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25.93%,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이 22.22%,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이 7.41%,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교육인지 의식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이 7.14%,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이 3.85%, ‘1회성 형식적인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구관련 교육과정 부재’와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이 동일하게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	3.04	29.63
2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	3.52	22.22
3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4.04	25.93
4	1회성형식적교육으로체계적인인구관련교육과정부재	4.19	3.7
5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교육인지 의식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4.61	7.14
6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	5.7	7.41
7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음	5.78	-
8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	5.81	3.85
9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	7.7	3.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가 1순위로 나타났고,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가 2순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가 3순위,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4순위,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가 5순위,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이 6순위,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가 7순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실시’가 8순위,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가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가 59.2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가 14.81%,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과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가 동일하게 11.54%,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실시’가 3.7%,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가 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1.93	59.26
2	자녀의 인구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3.93	14.81
3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4.29	3.57
4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4.31	11.54
5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4.92	—
6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5.23	—
7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	5.46	11.54
8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실시	6.15	3.7
9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	7.26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결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청소년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이 2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이

4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5순위, 청소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이 6순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이 7순위,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가 8순위,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음'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2.1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청소년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 결여'가 31.03%,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14.81%, '청소년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이 10.34%,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이 7.14%,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이 3.7%,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가 3.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 결여	3.31	31.03
2	청소년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	4.21	10.34
3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4.36	32.14
4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	4.41	3.7
5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4.48	14.81
6	청소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	4.93	—
7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4.96	7.14
8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	6.79	3.57
9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음	6.89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이 1순위로

나타났고,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2순위,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이 3순위,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가 4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5순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이 6순위,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이 7순위,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가 8순위,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가 9순위,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감시단 활성화’가 10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이 44.8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25.93%,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이 7.41%,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이 동일하게 7.14%,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가 3.7%,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와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이 동일하게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3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2.72	44.83
2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4.36	7.14
3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4.67	7.41
4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	5.1	3.45
5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5.3	25.93
6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	5.5	7.14
7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	5.55	3.45
8	지역별로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	5.89	—
9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	6.48	3.7
10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근로환경감시단 활성화	7.67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2) 청년 고용대책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이 1순위로 나타났고,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이 2순위,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가 3순위,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4순위,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가 5순위, '고용관련 세대갈등(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이 6순위,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이 7순위,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이 8순위,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이 9순위,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부족'이 10순위로 나타났다.

표 IV-2-14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	4.11	17.86
2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	4.21	10.71
3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	4.52	20.69
4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4.89	-
5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	5.07	14.29
6	고용관련 세대 간 갈등(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	5.41	20.69
7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	5.86	3.57
8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	6.21	3.45
9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	6.56	7.41
10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부족	7.37	3.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와 ‘고용관련 세대간 갈등(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이 동일하게 20.6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이 17.86%,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가 14.29%,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이 10.71%,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이 7.41%,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부족’이 3.7%,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이 3.57%,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이 3.45% 순으로 나타났다.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애발달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1순위로 나타났고,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2순위,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이 3순위,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4순위,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이 5순위,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가 6순위,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이 7순위,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이 8순위,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교육’이 9순위,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 개선’이 10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생애발달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44.8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고용관련 세대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이 20.69%,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이 10.34%,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동일하게 7.14%,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이 3.7%,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개선’이 동일하게 3.57%로 나타났다.

표 IV-2-15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3.14	44.83
2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4.36	7.14
3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4.45	10.34
4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4.79	7.14
5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	5.68	3.57
6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	5.79	3.57
7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5.9	20.69
8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	6.11	3.7
9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교육	6.33	-
10	3D 사업장의 근로환경개선 및 노동착취사업주 의식개선	6.64	3.5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아동학대 대책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이 1순위,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이 2순위,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 체계 미흡’이 3순위,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이 4순위,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5순위,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이 6순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7순위,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음’이 8순위,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미흡’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아동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이 34.4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이 21.43%,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14.29%,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이 13.79%,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 체계 미흡’이 10.34%,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3.57%,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이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6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아동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	3.28	34.48
2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	3.55	13.79
3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체계 미흡	3.59	10.34
4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	3.79	21.43
5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5.29	14.29
6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	5.31	3.45
7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	6.14	3.57
8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음	6.64	—
9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미흡	7.14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1순위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이 2순위,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가 3순위,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이 4순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가 5순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가 6순위, '아동학대 대책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7순위,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가 8순위,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위기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가 동일하게 24.1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아동학대 대책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14.29%,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제 개선'이 13.79%,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가 동일하게 10.71%,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7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3.07	24.14
2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제 개선	3.52	13.79
3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4	24.14
4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	4.11	10.71
5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4.75	10.71
6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	5.31	3.45
7	아동학대 대책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6.18	14.29
8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	6.18	—
9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6.96	—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2) 가출, 성매매, 비행 등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이 1순위로 나타났고,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2순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가 3순위,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이 4순위,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이 5순위,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이 6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연계체계 구축 미흡’이 8순위,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9순위,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10순위로 나타났다.

표 IV-2-18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	3.39	17.86
2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	3.79	34.48
3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	3.89	7.14
4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	4.66	10.34
5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	4.86	7.14
6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6.36	3.57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	6.72	—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연계체계 구축 미흡	6.75	3.57
9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6.83	—
10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7.24	17.24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34.4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이 17.86%,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17.24%,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이 10.34%,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와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이 동일하게 7.14%,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체계 구축 미흡'이 동일하게 3.57%로 나타났다.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났고,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2순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3순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이 4순위,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5순위,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이 6순위,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7순위,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8순위, '사법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이 9순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가 10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과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동일하게 21.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20.69%,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17.24%,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이 동일하게 7.14%,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이 6.9%,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가 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9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2.79	21.43
2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3.66	20.69
3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32	7.14
4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	4.48	6.9
5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	4.54	21.43
6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	6.11	7.14
7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6.17	—
8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6.97	17.24
9	사법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	7.31	—
10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	7.32	3.5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3)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및 지원 정책

가.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미비’가 2순위,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가 3순위,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이 4순위,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이 5순위,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이 6순위,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가 7순위,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존재’가 8순위,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임신·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가 34.4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가 21.43%,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이 13.79%,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이 10.71%,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가 10.34%,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존재’와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동일하게 3.57%,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미비’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0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	3.34	34.48
2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미비	4	3.45
3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	4.25	21.43
4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	4.28	13.79
5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5.28	—
6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	5.32	10.71
7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	5.41	10.34
8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존재	5.86	3.57
9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6.54	3.5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나.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이 1순위로 나타났고, ‘임신·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가 2순위,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3순위,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가 4순위, ‘임신·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가 5순위,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6순위,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가 7순위,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가 8순위,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9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이 34.4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임신·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교육 실시’가 25%,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가 13.79%,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10.71%,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가 10.34%,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가 7.14%,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평균	1순위 비율(%)
1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3.17	34.48
2	임신·출산과 가족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3.79	25
3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4.5	10.71
4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	4.62	13.79
5	임신·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	4.79	10.34
6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5	—
7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5.31	—
8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	6.21	7.14
9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6.68	3.57

*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임.

제 V 장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제 V 장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¹²⁾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제시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노동·복지 체계를 청소년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영역의 세부과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하였다.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정책과제

(1)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인구절벽과 관련한 가장 기본 정책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크게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나누는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없다. 다만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을 후기 청소년으로 간주할 경우 해당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이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마저도 고용과 일자리 질에 집중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청년(후기 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과 고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12) 제5장은 이유진이 제4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목차를 도출하였고, 각 소목차에 관해 1. 1)은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고, 1. 2)와 2.는 강지명(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이 집필하였으며, 3.은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 중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는 이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핵심과제로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 측정도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특성화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의 역량 측정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역량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과제는 청소년 인구감소를 연결지어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정책 환경분석에서 청소년 인구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핵심과제를 이어가되, 역량의 범위를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 및 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은 기존의 국가 청소년정책을 활용한 인구절벽 현상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마련, 인구절벽 현상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수립이다. 정책 내용은 인구절벽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 개념 확인 및 도출,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로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는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보완,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 분석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과제나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구절벽 시대와 연관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내용 추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대상은 9세 ~ 24세와 24세 ~39세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별도의 정책 마련 및 수립을 위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2)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 현상에 특화된 역량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2020)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서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에 관한 정책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결혼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와 후기 청소년의 결혼 자체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성교제,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9세에서 24세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유교 문화적 사회분위기 속에 이성교제를 청소년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청소년 관련 통계나 사회적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문화중의 하나이며 청소년의 이성교제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부터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바른 가치관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한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복지적 지원이 전부이다. 더욱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과 일자리, 노동환경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므로 청년대상의 이성교제,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청년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면 39세 이전까지의 아동, 청소년, 청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인구절벽 현상에 특화된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곳은 학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년의 자기개발과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연령 청소년의 연령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부분의 발의된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의 연령이 39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30대 이전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연령으로 법 개정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이성교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청년대상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청소년 및 청년의 교제의 장 마련 및 보급,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년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정책대상은 24세 이후 39세 미만의 미혼 청소년 및 청년이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이므로 24세 이후의 청소년 및 청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령대 조정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3)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로 논의될 만큼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세대 간 양극화도 있지만 청년이나 청소년의 경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와 가정환경에 따라서 점점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개발을 통해 청년은 보다 안정된 고용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확률을 높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다양한 역량 개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를 통한 참여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참여기회 균등화, 사회적 배제 청년 집중 지원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년 수당 도입(지역과 경제수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적 청년 수당 지원), 청년 복지 및 청년 역량 강화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과 법제도 정비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년 복지 및 청년 역량 강화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과 법제도 정비이다. 정책대상은 24세 ~ 29세 혹은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39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 및 청년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차등적 청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예산이 집행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정부가 청년 노동력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청년 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수당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청년의 역량개발에 있어서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

청소년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청소년 역량이 객관적으로 진단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즉 총괄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역량은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척도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혹은 주제별로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신뢰성이 있는 총괄관리 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관은 영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인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인증을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진단 총괄관리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인증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주기적으로 매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련 시설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역량진단의 과학화 및 표준화, 청소년 역량진단을 통하여 청소년의 맞춤형 자아개발의 기회 제공, 청소년 역량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구축과 인증제도 시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척도 점검, 개발, 수정,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총괄관리 기관 선정,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기관 인증을 위한 지표 개발, 청소년 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선정 및 운영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역량진단 도구 및 척도 점검,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 개발, 우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별 청소년 역량진단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기관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시 청소년 역량진단 기관 평가 및 선정, 인증 받은 기관에서 청소년 역량진단에 대한 총괄관리 등이다. 정책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역량진단이 가능한 청소년수련활동 우수 학교(학교급별)이다.

그 밖에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프로그램 인증을 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인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관인증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인증과는 별도로 운영하거나, 혹은 기관인증에 대한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핵심어 중의 하나는 창의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인공지능의 현실화로 인해 인간 사회의 삶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으로 바꾸어 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기존의 암기위주 지식 습득으로 성공하던 시대는 이미 21세기가 시작되며 종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사람의 두뇌를 이미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창의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암기 위주의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구상하고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청소년 활동과 연결하여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므로 청소년이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습득과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 플랫폼 발굴 및 교류 다양화 지원 등이다. 정책 내용은 4차 산업시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기회 개발, 국내외에서 신기술 습득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교류 사업 개발 및 청소년 파견, 청소년 교류 대상국가 대상주체(청소년시설 및 산업체 등)의 지속적 발굴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교류 주체 발굴 및 프로그램(사업) 공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청소년 파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해외 파견 대상을 공적 기관만이 아닌 민간 영역으로 주체를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책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포함)과 대학생부터 29세 청년이다.

그 밖에 청소년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교류하게 하는 경우 국제적 협약 체결과 기존 협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적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의 교류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하고, 신기술 습득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나 교육경험과의 연결고리 구축이 필요하다.

(6)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유럽연합이 청소년과 관련한 대표적 보고서인 EU Youth Report 2015와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인 EU Youth Strategy를 통해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공교육과정과 학교밖 교육과정의 연계, 교사이외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원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및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위주 입시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교원 양성 제도의 개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그 교육적 효과성과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개혁과 창의적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목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새로운 교육 전문가 양성,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등이다. 정책 내용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과의 연계, 청소년활동 참여의 입시 반영,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효과성 검증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학교교육 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 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입증을 위한 효과성 연구(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로 활용), 교원양성제도 개편(교원 임용 시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가산점 부여), 교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 전문가 양성(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정책대상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지도사이다. 그 밖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청소년활동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7)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

인구절벽 시대는 양질의 노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청소년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체험과 활동의 기회를 통해서 고용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이마저도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나 부서가 필요하다.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입시 교육의 기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허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 인구절벽시대에 필요한 노동력과 고용시장 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다. 정책추진 방법은 고용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노동 시장 분석 및 산업 수요 예측, 청소년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전담하기 위한 장단기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 학교 배치 등이다. 정책대상은 교육과정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이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청소년지도사, 교원양성 방안 개혁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8)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위한 정책개발, 예산지원, 사업집행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그 주 대상으로 하되,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과 정책 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전담 기구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안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독립 기구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 전담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과 지도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안에 청소년 전담 위원회로 일자리 외의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일자리나 경제 문제로만 치중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나 경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해야만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의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목적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전담 부서 내 청소년역량강화 부서 신설, 독립기구로서의 청소년 전담 부처 신설 및 관련 조직 신설,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내 청소년역량 전담 위원회 혹은 부서 신설 등이다. 정책 주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이다. 정책추진 방법은 독립기구로서의 전담부서의 신설, 기존 여성가족부 내의 하위 조직으로서의 전담부서 신설,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내의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조직 구성 등이다. 정책대상은 정부 부처 및 관련 조직이고, 그 밖에 기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담당 부서와의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9)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선거연령 하향화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청소년이 직접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즉 선거를 통해 사회 참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선거참여 연령이 19세로 국제시민교육 비교연구에 참여한 국가 중 가장 선거 참여 연령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이 아닌 졸업이후에 선거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10대 청소년은 사회참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피동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재학 시절에는 자신의 의견을 공적인 사회제도 안에서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선거 참여 연령 하향화를 통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 사회참여 연령 하향화, 청소년 선거권 보장 등이다. 정책 내용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령 하향화 운동과 과년하여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화를 위한 논의 제기, 18세 혹은 17세의 청소년에게 점진적으로 선거권을 줌으로써 이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사회참여 관련 활동 및 교육 제공,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즉 선거권 보장이며, 정책대상은 청소년 참여 관련 법(청소년기본법 등)이다. 그 밖에 선거권 하향 조정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대협력도 필요하다.

(10)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

한국사회에서의 창업은 성인에게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청소년시기부터 창업에 대한 역량개발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노동시장은 창업에 있어 많은 경쟁과 기회부족을 야기하게 되고 창업시장의 제약을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대기업 위주의 노동시장 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경쟁 배제,

다양한 해외 창업을 위한 장기적 지원 계획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성공한 창업사례와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청소년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멘토링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도록 하고,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창업 활성화, 청소년 창업 멘토링 활성화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창업을 위한 멘토-멘티제 운영, 창업 초기 5년간 기본 소득 보장,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창업 시장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관리 및 창업아이템 개발 보급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및 청년 창업 멘토링 및 창업 사업 아이템 개발, 창업 분야 개발 및 초기 창업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창업을 위한 기본 역량 교육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창업 분야 확대를 위한 정부 내(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관련 조직 신설 등이다. 정책대상은 19세 이상의 창업 희망 청소년 및 청년이고, 그 밖에 창업 멘토링에 참여하는 기업 발굴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지원, 해외 창업을 위한 전문 조력 기관 개발(민간, 공공 모두)이 필요하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정책과제

(1)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이 인구절벽 해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이 가능해야 한다. 초기 인구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기-승-전-그래서 출산해야한다’였다. 김태현 외(2011:19)에서도 인구교육의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관점이 ‘출산력’으로 잘 이어지느냐였다. 어떤 정책적 장치이든 출산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지금은 인간존중과 가족에 대한 개념, 인구의 특징에 대한 내용, 복지적 접근이 함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교육이 출산장려교육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윤인경 외(2015: 10)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학교 인구교육은 사회 인구교육에 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로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고 있음.

· 실제 중,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연구 결과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많거나 저출산고령 사회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인구교육으로 저출산 대응 차원의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인구교육 프로그램이 출산장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치관 재정립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각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결혼·자녀·성역할 가치관 재정립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가 필요함.”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제시와 주입, 가정에 대한 미화 등이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사회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기인한 인구절벽의 부정적 모습으로 인식시킬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의 제시 등을 통한 극복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교육이후 ‘자녀는 필요하다’라는 인식결과가 교육의 평가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등의 가치관 재정립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홍해숙 외(2011: 153~154, 164)는 ‘찾아가는 결혼성공 사관학교’라는 6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인식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성역할 가치관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제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는 것은 다르다. 이성을 사귀지 못하거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지속할 수도 없다. 성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재정립 등이 없이는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결혼은 좋은 것이고 출산은 필요하다’가 주입되는 교육은 실질적인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이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유미·김미경(2012: 227)은 경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는 매우 필요하다’고 42%가 응답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저출산이 가족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의사소통능력,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탈피, 가사노동 능력 등)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자녀양육방법)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의 목표가 ‘출산’이라는 것은 당장 출산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출산장려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치관의 재정립’이며, 이 과정에서 중산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출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상황에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만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결혼 좋아요, 출산은 해가지요’라는 해피엔딩 동화적 인구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관혼상제가 큰 의미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관혼상제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의 고민을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인구교육을 위한 전문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부정적인 것이니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자라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한다는 교육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과 선택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결혼과 출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원이 양성되어야하고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의 동기를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통해서 출산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 맺기,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기, 집단과 집단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관계를 발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갈등관리의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의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풀고 개인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풀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갈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다. 힘들지만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갈등을 관리하고 풀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 단편적인 ‘출산력’에 집착하여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의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

초중고의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의 하나로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나 더하는 형태인 교과개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교과에 충분히 녹여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인구교육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연수할 수 있는 전문교원의 양성을 뜻한다. 전 교직원이 인구교육에 대한 핵심요소를 인식하고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인구교육일 것이다.

(5)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적인 측면으로 집합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몸으로 재미있게 익힌 것은 오래 기억되고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한다. 지속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인구교육의 핵심내용으로 해왔지만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교육은 한계가 있고 청소년시설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인구교육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사 이외의 전문교원의 양성은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원을 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6)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성교제에 건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관계맺기이다. 연습없는 실전은 없듯이 청소년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리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당장의 출산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결혼에 대한 환상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만 심어줄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길도 터 주어야한다. 유흥의 과정에서 술과 이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한다는 측면에서 음주없는 이성교제의 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성교제의 모델과 그 방향성을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다.

(7)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집구석, 방구석 등의 가정비하 용어의 순화, 가정중심적인 사회문화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장중심, 성과중심, 결과중심과 맞물리는 사회에서 가정중심, 과정중심의 핵심인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출산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의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운동과 연계되어야한다. 가족정책이라고해서 ‘1가구 2자녀 낳기, 다자녀 지원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8)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이 원초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출산 전후의 과정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특정 이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9)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실시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는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교육에 인권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교육되어야 한다.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이 독립된 개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독립성은 경제적인 독립이 전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근로는 경제적인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이러한 발판을 통해서 청년기의 경제적인 독립과 결혼에 이은 출산으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근로보호는 노동력 착취에서 보호받아야하는 기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들과 청소년 기에서 성장을 위해 우선되어야할 내용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근로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근로보호의 과정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할 것이며 청년기의 근로로 연계될 수 있고, 장기적인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하는 안전한 노동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들이 훈련 및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훈련 및 실습으로 현장에 나간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일선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 외에 당근책도 마련해야한다. 지도감독이 지적과 처벌로 이루어져서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제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것들만 피한 노동환경만 제공된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청소년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최소한 제공되어야할 청소년

의 근로현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 활성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을 인지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마음가짐을 가진 감시자는 학부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근로기준,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의 편리함 추구가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환경감시단의 기준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는 청소년의 근로보호의 최고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감시단이 필요하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저해환경이나 요소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남길 만큼의 유해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속어의 사용이나 욕설, 성적 표현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언어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터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공감과 감시능력은 같은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서 가장 잘 인지될 수 있다.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의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교사의 감시단활동은 오히려 청소년 근로환경을 배우고 청소년의 근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사연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 교사,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의 핵심담당자로서의 고유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이 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5)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안 듣고 안 볼 수도 있는 이러닝(E-learning)이나 설명서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받은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한다. 사용자의 시간을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서 사용해야한다면,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가능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6)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청소년보호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로보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취업정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청소년의 성장기에 맞는 취업군의 설정과 단계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어떠한 노동현장이 15세~18세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군인지에 대한 설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집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적절한 수면과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악의 근로가 된다.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임금을 받는 청소년에게 노동현장, 안전한 근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취업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노동권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 혼자서 일하더라도 적정수면·식사과 규칙적 운동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은 새로운 자기관리/자율적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용창출중심의 취업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관리/자율적 근로보호정책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7)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나 담당자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나눈다. 청소년에게는 학교, 부모님,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청소년의 침해된 노동인권에 대해 접한 주변인인 학교관계자, 부모님, 또래가 상담하거나 해당청소년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각 지역고용노동센터에 청소년노동전문담당가가 필요하며, 청소년노동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지원가가 필요하다. 지원가는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청소년과 의사소통 및 공감이 가능한 인력이여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센터에 청소년 근로담당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상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8)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립은 인구절벽의 주요 해결책인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학교와 가정의 밖에 있는 청소년이 취업하고 창업할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9)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

마이스터고와 과거 산업체 부설고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체 부설학교가 취업된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이었다면, 마이스터고는 학생신분이 우선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전문성이 마련되어야한다. 시혜적이고 전시적인 취업지원 및 알선은 미봉책이 될 것이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특성화고도 지원하면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

청소년이 본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학생,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취업담당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활을 관리하고,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친구와 부모와 교사와의 인간관계 맺기와 직상상사 및 동료와 인간관계 맺기는 다를 수 있다. 조직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자신이 해야할 책무를 다하는 것까지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청소년취업담당기관을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세대간 상생고용지원프로그램과 같이 고용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기성세대와의 공감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직접적인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하면서 세대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년고용활성화가 중장년층의 퇴직을 앞당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더 빨리 퇴직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층에게 인구절벽의 의미와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캠페인과 광고 등을 통해서 관심을 끌되, 역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청년세대를 비난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가져오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기론만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위기론을 통해서 세대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공감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로 조금 양보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2)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일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실업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는 청년 고용활성화의 대응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고용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은 기존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 동 플랫폼은 창업지원과 연결되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고용시장을 단순히 연결하는 역할을 가지고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창업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관들이 있지만, 단순히 창업지원만을 하거나,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요공급연결 플랫폼은 고용시장 그 자체가 되어서 통합과 융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존의 모든 센터들이 필수적인 역할인 ‘수요공급의 연결’과 ‘창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3)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

대졸청년 고용대책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청년고용활성화정책의 지원기관이 대학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학에 설립되는 고용지원기관은 대졸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기관이다. 청소년고용지원기관(청소년고용노동센터)을 마련하여 특성화고 졸업자가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한다. 특성화고 졸업자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부터 고용정책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만15세부터 청소년고용노동센터를 통해서 고용지원을 받아야한다.

또한 수요공급연결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창업 및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있어야한다.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똑같은 지원기관을 마련해주는 방법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4)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자기관리의 측면에서 노동권과 사회생활적응을 교육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19세에서 29세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절벽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다.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서울의 경우 청년허스사업은 만19세~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과 일의 병행이 가능한 방법이 교육되고 상담 및 지원되어야할 것이다. 일과 결혼 및 출산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대한 불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과 결혼 및 출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받을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 청년고용만 촉진하다고 인구절벽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혼과 일과 출산에 대한 생활 적응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5)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전체고등학교 및 대학교,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사립고, 인문계일반고, 마이스터고, 영재고, 대학, 산업체 등이 모두 수요고용연결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고 창업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 밖청소년, 학교 밖청소년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고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

(6)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분야 전문기술 교육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의 처리와 이용능력이다. 빅데이터를 소화해낼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탄생하여 인간못지 않은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다.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과 데이터처리 결과를 활용할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기반인터넷(IoT)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기존의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과정 및 결과값의 통합과 융합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분야의 전문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7)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 개선

힘든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벌칙규정의 홍보와 정확한 지시감독이 필요하다. 3D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착취 사업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의 의식개선교육과정에서는 기본권 중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착취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보장차원에서 국가가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8)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9세에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업지원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에게는 반드시 결혼 및 출산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지원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인구절벽의 대책에 ‘결혼 및 출산, 일자리’를 삶 속에서 균형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청년이 되기 전까지 한번도 ‘결혼 및 출산, 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당면한 과제인 일과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9)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은 인턴제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노동력착취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용주가 있다. 또한 유동적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문제이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고용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0)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보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거나, 재미있고 즐거운 직업이 개인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행복감이 조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행복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11)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고용정책의 평가와 결과의 반영

인구절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청년고용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책에 대한 수립만 공유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집행과정과 결과도 평가하고 공유하여 그 내용이 반드시 다음 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1) 인구절벽 시대 아동학대 현상에 대한 장기적 추이 전망과 탐색

아동학대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 가정환경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해자 개인의 폭력적이고 충동적 성향, 가정의 빈곤과 박탈감,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소멸과 전체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함께 영향을 미쳐서 아동학대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 아동학대 사건 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간과되던 아동학대 현상이 이제는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사회적 일탈이요, 형사법적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이에 따라 사건을 드러내고 신고하는, 이른 바 숨은 범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아동학대의 양적 증가를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부추기는 것이 있다면, 또한 가정의 빈곤과 박탈감을 배가시키는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심화된다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아동학대 현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그 근거가 약하다.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심화와 저성장은 개인적 수준의 좌절을 심화시키고, 삶의 수준을 더 어렵게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현상이 고조된다면 아동학대 현상은 더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인구절벽 현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보다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병렬적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사회적 현상이 아동학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장기적 전망을 하고, 그에 필요한 단기적, 중장기적 접근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

다음의 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현황을 보여준다. 직군으로 볼 때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경우는 초중고교 직원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접촉을 많이 하는 학교 교직원들이 가장 먼저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학교현장의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거나 “학대, 방임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사후조치에 중점을 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신고건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발견과 개입절차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도 필요하다.

표 V-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단위: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초·중·고교 직원	594	732	716	1,988	2,172
의료인	88	85	93	123	13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38	424	403	275	25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4	28	11	24	46
보육교직원	178	166	223	273	309
유치원교직원, 강사	40	84	20	43	6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6	13	7	26	31
소방구급대원	10	16	11	28	22
응급구조사	—	0	0	2	0
의료기사	—	4	6	0	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45	39	8	2	12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51	75	20	7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3	13	13	10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99	233	191	174	28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69	904	1,055	700	6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102	234	104	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57	336	151	21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15	17	27	3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21	17	18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27	27	20	4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34	46	78	49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123	160	185	140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45	37	14	28
아이돌보미	—	—	—	0	9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	—	—	73	298
계	2,704	3,316	3,706	4,358	4,900

* 주: 1)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2)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재구성.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생각해 볼 때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치할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의 효과성은 높아질 수 있다. 현재도 상담교사들이 초중고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임시직, 계약직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개입하고 사후보호까지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과목담당교사로 하여금 상담교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활발한 상담활동을 통한 적극적 사례발굴이 어렵다. 따라서 상담활동을 통해 가정내 문제나 학대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의 배치와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다음 표에 나타난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을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사건의 80%를 넘고 있다. 강은영 외(2015: 406-407)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은 부모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였으며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8.9세,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3.24세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이 자녀출생 직전이나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임신 정기검진이나 출생신고시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아동학대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가 부모교육 분야이다.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연구한 이인선 외(2013: ix-xii)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생애주기별, 성별, 가족유형별, 학대여부 등을 고려한 대상별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학대부모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취약가정 지원 서비스와의 연결, 출산, 양육지원 서비스와의 연결, 학교에서의 부모교육 제도화 및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한 약 23만명의 부모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연수자료에 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등의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2017: 4-5).

표 V-3-2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 (단위: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6,403(100)	6,796(100)	10,027(100)	11,715(100)	18,573(100)
부모	5,370(83.9)	5,454(80.3)	8,207(81.8)	9,348(79.8)	14,986(80.7)
친인척	435(6.8)	351(5.2)	559(5.6)	562(4.8)	790(4.3)
대리양육자	397(6.2)	786(11.6)	990(9.9)	1,431(12.2)	2,105(11.3)
(어린이집 교직원)	110(1.7)	202(3.0)	295(2.9)	427(3.6)	562(3.0)
(유치원 교직원)	31(0.5)	53(0.8)	99(1.0)	203(1.7)	332(1.8)
(초중고교 교직원)	16(0.2)	28(0.4)	145(1.4)	234(2.0)	457(2.5)
(학원·교습소 종사자)	37(0.6)	11(0.2)	80(0.8)	64(0.5)	157(0.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119(1.8)	389(5.7)	206(2.1)	325(2.8)	283(1.5)
(부모의 동거인)	75(1.2)	86(1.3)	146(1.5)	158(1.3)	305(1.6)
(위탁 부모)	3(0.0)	13(0.2)	12(0.1)	13(0.1)	5(0.0)
(베이비 시터)	6(0.1)	4(0.1)	7(0.1)	7(0.1)	4(0.0)
타인	108(1.7)	85(1.3)	124(1.2))	187(1.6)	200(1.1)
기타	70(1.1)	85(1.3)	129(1.3)	166(1.4)	452(2.4)
파악안됨	23(0.3)	35(0.5)	18(0.2)	21(0.2)	40(0.2)

* 출처: 보건복지부와(2017: 8), ‘아동학대 대책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정부의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고 부모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취약가정의 부모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성윤숙, 2016: 127).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여전히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개설이 필요하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 혼외임신, 한부모 등에 대해서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고 자녀의 발달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일회성의 교육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부모가 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진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발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점이다.

표 V-3-3 아동학대 예방기관 설치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4	46	50	51	55	59
학대피해아동쉼터	—	—	—	36	40	53

* 출처: 보건복지부(2016: 87), 2015 보건복지백서 재인용.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2011년 44개소에서 2016년에 59개소로 늘어났으며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도 2014년에 36개소에서 2016년 53개소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임상심리 전문 인력 최소한 1명이상 배치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1인의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사례수가 많아 2014년 한해 1인당 245.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앞으로 그 업무량은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정부, 2017: 31) 추가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은주(2015: 83)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양적 확대를 제안하였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522명으로 한국과 아동인구 규모가 비슷한 캘리포니아 주의 상담원 4,932의 10%에 불과하다(김형모외, 2016: 35). 강은영 외(2015: 412-413)의 연구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상담원 증원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인구수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피해아동을 위한 장기쉼터의 증설과 전문상담원 배출방안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보호, 격리보호(친인척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가정복귀로 분류하여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대한민국 정부, 2017: 30). 2016년 통계로 볼 때 총 18,573건 중에 약 73%가 원가정보호로 최종결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행위자가 격리된다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학대행위자 없이도 남은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연계 등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김은정, 2016: 38).

표 V-3-4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연도	계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2012	6,403	4,079	532	56	31	531	749	38	10	377
2013	6,796	4,376	526	37	25	358	960	38	22	454
2014	10,027	6,666	924	73	56	614	891	52	17	734
2015	11,715	7,760	1,030	114	30	636	899	63	19	1,164
2016	18,573	13,506	1,323	101	32	1,177	1,051	66	50	1,267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재구성.

(6) 경찰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고 ‘가족끼리 잘 해결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인해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깨달은 선례가 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학대자들은 ‘내 아이 내가 훈육하는 데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경찰이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고조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강은영 외(2015:406)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한 의료진, 보육교사 및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이은주(2015:79)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간간히 드러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설안전과 아동학대 등 위험방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강은영 외(2015: 408)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영유아 교육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관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설 내 학대사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19.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신고의무자인 부모에 의해 신고된 비율이 72.4%로 월등히 높았다. 연구자들은 CCTV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사건처리의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더 높으며 시설 내 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CCTV와 같은 기계적 감시보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일명 셉티드)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감시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 아동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다.

(8)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먼저 정부가 하고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체계를 살펴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시 경찰이 동행하도록 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강화하였다. 경찰 동행출동은 2013년에는 55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0,13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법무부는 2014년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한 경우 1회 범행도 적극적으로 구속을 검토하고, 원칙적 구공판, 구상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 구형 등을 확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30).

이러한 처벌적 개입의 강화와 더불어 치료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은주(2015:80)는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원인이 양육기술 미숙, 경제적문제와 스트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접근은 아동학대의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례법에서 수강명령을 제도화 한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처벌적 개입 뿐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고위험군 위기 부모에 대해서는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9)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

아동학대가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경제적 빈곤과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초중고 교원 연수자료에 부모교육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보다 넓은 전체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발현되는 양태는 차이가 있지만 왕따나 집단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집단 폭행 등의 폭력사용,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기저에는 폭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폭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인권교육, 아동권리교육, 부모 되기 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편입되어 공식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인구절벽 문제의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사회의 주류적 흐름에서 뒤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규모를 줄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라도 낙오자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인구감소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젊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위기청소년 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2)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예로 위기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2010, 2016년까지 세 차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유형이나 위기수준을 살펴보고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규모, 위기유형의 변화들을 파악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6: 166-167).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규모를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예측한다면 위험행동이 발생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구체적 위기유형별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성매매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이미 다양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의 정기적 시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했다는 의견들을 인터넷에 쏟아냈고 가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과 불만을 토해내었다. 동시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을 보는 지배적인 인식이다.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와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배제와 고립의 전략을 통해 “우리는 정상이구나, 우리는 선이구나”라는 고정관념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 루시퍼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사회적 상황이 우리를 악하게 또는 선하게 만들게 됨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 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행동의 최종적 선택은 개인이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는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의 전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배제되고 고립된 인간들은 더욱 극단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기청소년들 비행청소년,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되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4)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경기도의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연구(전경숙, 2012:8)에 따르면 향후 원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1%였고, 가족들이 찾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9.8%여서 약 34%의 청소년들은 가정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청소년들이었다. 전경숙(2012: 11-12)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 문제가 있어 집을 나온 경우이기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의 가출생활로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성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은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5.8%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2012: 8). 가정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갈등해결 등 가정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

위기가정에서 위기청소년이 나오고 위기가정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빈곤이다.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적대적인 가정환경을 만들고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관심을 위협에 빠트리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가출 등의 위기청소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도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6). 2011년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16년에는 229개 시군구까지 확대되었다. 예산도 증가하였고 대상아동도 44,000여명에서 134,0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표 V-3-5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단위: 개소, 억원, 명)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 시·군·구	131	181	211	219	229	229
예산(억원)*	372	462	576	632	658	668
대상 아동(명)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제출자료, 대한민국 정부(2017: 71)에서 재인용.

한편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등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예산과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도 모색되어야 한다. 위기가정에 개입하여 중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져야 한다.

(6)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들이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촘촘히 전달되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처 간 정보교환과 협업시스템을 통해 중복적인 시설투자나 예산투여 등이 방지되어야 한다. 각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이 중복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7)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법적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도용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잠재적 위기청소년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접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에서 자퇴를 할 때 자퇴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함께 받는다면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학교 밖 지원센터로의 연계를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8)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은 그 양적 규모나 예산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아래 표를 보면 특히 시군구 단위의 안전망 숫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체계는 주로 양적인 성장에 집중을 하고, 지원체계의 평가도 양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온 것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통합지원체계에 들어 있는 1388 청소년지원단이나 상담전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처럼 인적자원의 투입이 중요한 서비스의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남윤인순, 2013:56) 그래야 인적자원의 투입이나 예산의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3-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도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170개소	174개소	180개소	180개소	184개소	206개소
합 계	186개소	190개소	196개소	196개소	200개소	223개소
예산액	8,571	11,045	11,729	12,299	12,669	12,072*
이용인원	145,376	149,307	183,328	242,230	224,792	

* 주: 1) 2016년부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별도 내역사업 분리

2) 이용인원은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 백서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102). 여성가족부 CYS-Net 통계시스템에서 재인용.

(9)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가정이나 학교를 떠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잘 곳’을 찾는 것이다. 청소년쉼터는 이러한 거리 배회 청소년을 위해 숙식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꺼린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 이유는 쉼터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과 감시가 그들에게는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상황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질적 면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윤숙(2016: 123-130)은 각각의 유형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윤인순(2013: 61-68)도 효과적인 위기청소년 개입을 위해서는 고위험군 청소년, 잠재위험군 청소년, 저위험군 청소년 등 위험정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피해청소년이나 장기 가출청소년 등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야 하고 잠재위험군 청소년을 위해서는 위센터나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위기 알라밍(alarming) 시스템을 만들고, 저위험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 사범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구금되어 수용된다. 정부에서는 소년원이나 구금된 소년수용자들을 위한 인권적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나 서신, 접견 등에서 성인수용자보다 횟수에서 더 많은 것을 보장받고 있고, 교과교육이나 직업능력훈련,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인수용자는 번호로 호명이 되나 소년수용자들은 이름으로 호명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인권적 처우의 일환으로 대구소년원을 시작으로 4인1실의 거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퇴원 후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 사회정착을 돕고 있으며 기숙형 직업훈련시설인 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소년원생들은 한 방에 20명씩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종목도 제한적이다. 소년교도소도 과밀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과밀의 완화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임신 출산 청소년들의 욕구 중 가장 긴급한 것 중의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다(백혜정, 2012: 196).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200). 청소년 한부모 가족 생활을 연구한 백혜정(2012: 135-139)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모의 72%가 시설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시설에 입소한 이유를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약 63%였고, 그 다음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하려고 시설에 입소했다는 것이었다(25%). 그만큼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확대가 중요하다.

표 V-3-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시설현황

(2016.12.31. 기준)

구분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기본 생활 지원	42	6	6	5	1	2	1	1	2	1	1	2	4	2	5	2	1
정원 (세대)		1,026	136	155	169	30	32	20	27	49	24	30	40	86	45	117	50	16
부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기본 생활 지원	2	1			1												
정원 (세대)		40	20			20												
모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기본 생활 지원	3							1			1		1				
정원 (세대)		41							10			7		24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6년 현재 지원시설의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설이 1-2개소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원이 찰 경우 다른 시설로 보낼 대안이 없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미혼모가 거주할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보호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생물학적인 설명이나 성에 대한 전통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의 성교육은 시대와 맞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피임방법 등 실질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이 엿보이고 있으나,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6)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피임률은 5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질외 사정이나 사후피임약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재영, 2017: 260).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활발해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신시 의료와 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 임신, 출산,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규모 집단상담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당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3)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청소년의 이성교제, 임신, 출산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엄숙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과업은 학업과 장래준비에 있고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척이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을 한 청소년, 나아가 출산을 한 청소년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한부모 청소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지체계가 단절되고 학습권 보장이 안되며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사회에서의 차별도 심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이 설 땅은 별로 없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적절한 양육도 어려워지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나아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더 낳아서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출산청소년을 받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그들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자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해 이준일(2013: 4-12)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도 본인이 원하면 임신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하거나 낙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학생이 임신했다고 자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권리이다. 셋째,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권리이다.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지원, 취업기회, 교육기회 등에서 차별적인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거확보나 취업기회, 교육기회에서 한부모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꼼꼼히 살펴서 차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

지금까지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 문제는 일탈과 위기청소년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단순히 임신을 막는 피임법이나 사후 대책을 강조하는 좁은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인 성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생리와 관련된 문제, 성병과 관련된 문제, 임신과 관련된 문제 등이 생식건강 또는 성건강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성교제와 성행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리와 관련된 생식보건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성병예방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강조하는 순결교육 프레임만으로는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은 “성재생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장필화 외, 2017: 64)”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필화 외(2017: 64)에 따르면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 재생산과 관련된 선택과 참여의 개인적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성적 자기결정권,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출산의 규모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기본적인 인권 및 권리와 연결시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성재생산건강권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을 포함한 성건강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임신 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

백혜정 외(2012:2 61-262)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과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준비 없이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게 된다고 한다. 임신후 생리가 중단되어도 그것을 임신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배가 불러 오고서야 임신임을 알게 되고,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거나 복대를 졸라매어 임신사실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출산을 하고 아기를 유기하거나 숨지게 했다는 기사도 흔하게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상담 등을 통해서 임신출산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단체, 유관기관들의 임신 출산 전반에 걸친 예비교육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관련 교육이라고 해서 여자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상대 남성이나 그 가족은 책임을 나누려하기 보다 회피하려 드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청소년에게도 그들의 성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임신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여성에 대한 인권존중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미혼모 시설이나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출산을 하여 미혼모가 되는 경우 거주할 곳이 없어 쫓길방을 전전하거나 지원제도를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각 지자체의 시설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미혼모보호시설, 청소년 한부모 쉼터, 그리고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하는 리플렛 등을 작성하여 학교, 학원, 청소년 시설 등에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청소년 미혼모를 조장하는 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현실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 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은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존중이자 인권보호의 출발점이다.

(8)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도 원하는 경우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학 중 임신과 출산을 하면 학교로부터 자퇴를 종용받거나 여러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방안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며 그 해결도 하나의 제도로 풀어나가기는 어렵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가시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36).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온라인 학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학업도 병행해야 한다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학습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이 세 가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9)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백혜정 외(2012: 27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중 취업중인 경우가 13%였고, 그나마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5.1%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지원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교육, 취업지원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백혜정 외(2012: 278-279)는 정책제안에서 진로발달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대일 맞춤형상담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연계 제도가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취약한 집단이다. 사회적 배제를 이겨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내야 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하면서 생존을 위한 일상의 필요도 마련하고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생산성 있는 노동력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지원이다.

제 VI 장



결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제 VI 장 결론¹³⁾

1. 주요결과

이 연구에서는 인구절벽이나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변화에 관한 의견

먼저 청소년정책의 인구대책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바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인구가 줄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더 높아진다는 의견이 대부분(27명)이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합·혁신 과제로 제시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26명)의 전문가가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서도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체계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렴할 수 있고, 노동 체계에는 청소년보호정책 중 근로보호정책을 수렴할 수 있으며, 복지 체계에는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세부 과제를 인구의 양적 관리 측면과 질적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19명)가 찬성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처들이 협력해야

13) 제6장은 이유진이 요약하였음.

할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17건)와 교육부(16건), 여성가족부(14건), 고용노동부(14건), 법무부(7건), 문화체육관광부(7건), 행정안전부(6건), 국토교통부(4건), 기획재정부(4건) 등이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그림과 같이 SWOT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으로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내부적 약점으로는 ‘낮은 정책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이 1순위로 제시되었다. 인구절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위협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가 1순위로 제시되었다.

	S(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W(청소년정책의 내부적 약점)
내부 요인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 전문가집단 존재 • 청소년 활동정책 인프라 구축 • 청소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 다양한 부처의 청소년정책 추진 • 다양한 연령대의 정책대상 • 높아진 역량증진의 중요성 • 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자원 • 청소년의 높은 참여의식과 개입반응성	• 낮은 정책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 • 청소년정책의 작은 예산 및 인력 규모 • 부처간 소통 및 협업 컨트롤타워 부재 • 투표권이 없어 밀리는 정책 우선순위 •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성과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 발생 •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 • 인구증가와 직결되지 않는 대상 •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
	O(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	T(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
외부 요인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청소년문제와 위기청소년 관심 증가 • 인구자질 향상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 집중도 증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역량강화 활동증가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 제고 •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유학생 유입증가 • 경쟁문화 완화 및 완전고용 가능성 증가	•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 • 고령인구와의 세대 간 갈등 심화 • 4차산업혁명으로 청소년의 무력감 심화 • 청소년정책 규모의 축소 • 개인주의 문화로 공동체의식 약화 • 계층 양극화로 소수의 청소년 기회독점 • 청소년 전문인력의 감소 • 청소년에 대한 관심 감소 및 부정적 인식 • 생식보건 건강이 약화된 청소년 증가

【그림 VI-1-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SWOT 분석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이 2순위,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취약’이 3순위,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이 4순위,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역량강화 활동 미흡’이 5순위,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이 6순위, ‘인구절벽 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가 7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활동 취약’이 8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등 인프라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났고,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2순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양성을 통해 입시위주교육제도 개혁’이 3순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활동 활성화’가 4순위,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가 5순위,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가 6순위,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가 7순위,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가 8순위,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현상에 특화된 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9순위, ‘지역별 총과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이 10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은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이 1순위로 나타났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이 2순위,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1회성 형식적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구관련 교육과정 부재’가 4순위,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교육인지 의식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이 5순위,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이 6순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음’이 7순위,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이 8순위,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가 1순위로 나타났고,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가 2순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가 3순위,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4순위,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가 5순위,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이 6순위,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가 7순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실시’가 8순위,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가 9순위로 나타났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은 ‘청소년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결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청소년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이 2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3순위,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이 4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5순위, 청소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이 6순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이 7순위,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가 8순위,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음’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이 1순위로 나타났고,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2순위,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이 3순위,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가 4순위,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5순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이 6순위,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이 7순위,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가 8순위,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가 9순위,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감시단 활성화’가 10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은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이 1순위로 나타났고,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이 2순위,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가 3순위,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4순위,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가 5순위, '고용관련 세대갈등(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이 6순위,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이 7순위,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이 8순위,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이 9순위,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부족'이 10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생애발달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1순위로 나타났고,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2순위,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이 3순위,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4순위,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이 5순위,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가 6순위,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이 7순위,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이 8순위,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 분야 전문기술 교육'이 9순위,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 개선'이 10순위로 나타났다.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은 '아동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이 1순위,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이 2순위,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 체계 미흡'이 3순위,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이 4순위,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5순위,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이 6순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7순위,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음'이 8순위,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미흡'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위기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1순위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이 2순위,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가 3순위,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이

4순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가 5순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가 6순위, ‘아동학대 대책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7순위,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가 8순위,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이 1순위로 나타났고,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2순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가 3순위,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이 4순위,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이 5순위,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이 6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이 7순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연계체계 구축 미흡’이 8순위,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9순위,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10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났고,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2순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3순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이 4순위,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5순위,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이 6순위,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7순위,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이 8순위, ‘사법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이 9순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가 10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은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가 1순위로 나타났고, ‘임신·출산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미비’가 2순위,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가 3순위,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이 4순위,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이 5순위,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이 6순위,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가 7순위,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존재’가

8순위,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9순위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이 1순위로 나타났고, ‘임신·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가 2순위, ‘임신·출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3순위,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가 4순위, ‘임신·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가 5순위,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6순위,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가 7순위,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가 8순위,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9순위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되었던 모든 과제들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특히 다음의 과제들은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중요도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았던 과제들로써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인구절벽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과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정책과제

①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위한 정책개발, 예산지원, 사업집행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그 주 대상으로 하되,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과 정책 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전담 기구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안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독립 기구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 전담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과 지도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안에 청소년 전담 위원회로 일자리 외의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일자리나 경제 문제로만 치중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나 경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해야만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인구절벽과 관련한 가장 기본 정책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크게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나뉘는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없다. 다만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을 후기 청소년으로 간주할 경우 해당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이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마저도 고용과 일자리 질에 집중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청년(후기 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과 고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 중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는 이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핵심과제로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 측정도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특성화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의 역량 측정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역량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과제는 청소년 인구감소를 연결지어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정책 환경분석에서 청소년 인구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핵심과제를 이어가되, 역량의 범위를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 및 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유럽연합이 청소년과 관련한 대표적 보고서인 EU Youth Report 2015와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인 EU Youth Strategy를 통해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공교육과정과 학교밖 교육과정의 연계, 교사이외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원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및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위주 입시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교원 양성 제도의 개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그 교육적 효과성과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개혁과 창의적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정책과제

①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관혼상제가 큰 의미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관혼상제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의 고민을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야할 것이다.

②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집구석, 방구석 등의 가정비하 용어의 순화, 가정중심적인 사회문화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장중심, 성과중심, 결과중심과 맞물리는 사회에서 가정중심, 과정중심의 핵심인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출산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의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운동과 연계되어야한다. 가족정책이라고해서 '1가구 2자녀 낳기, 다자녀 지원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③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이 원초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출산 전후의 과정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특정 이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인구절벽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하는 안전한 노동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들이 훈련 및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훈련 및 실습으로 현장에 나간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일선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 외에 당근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도감독이 지적과 처벌로 이루어져서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제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것들만 피한 노동환경만 제공된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청소년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최소한 제공되어야 할 청소년의 근로현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청소년보호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로보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취업정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청소년의 성장기에 맞는 취업군의 설정과 단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노동현장이 15세~18세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군인지에 대한 설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청소년은 적절한 수면과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악의 근로가 된다.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임금을 받는 청소년에게 노동현장, 안전한 근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취업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노동권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일하더라도 적정수면·식사·규칙적 운동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은 새로운 자기관리/자율적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용창출중심의 취업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관리/자율적 근로보호정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9세에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업지원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에게는 반드시 결혼 및 출산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지원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인구절벽의 대책에 ‘결혼 및 출산, 일자리’를 삶 속에서 균형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청년이 되기 전까지 한번도 ‘결혼 및 출산, 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과제인 일과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②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은 인턴제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노동력착취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용주가 있다. 또한 유동적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문제이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고용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보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거나, 재미있고 즐거운 직업이 개인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행복감이 조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행복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3) 인구절벽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①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시 경찰이 동행하도록 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처벌적 개입의 강화와 더불어 치료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은주(2015: 80)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원인이 양육기술 미숙, 경제적문제와 스트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접근은 아동학대의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례법에서 수강명령을 제도화 한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처벌적 개입 뿐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고위험군 위기 부모에 대해서는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보호, 격리보호(친인척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가정복귀로 분류하여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대한민국 정부, 2017: 30). 2016년 통계로 볼 때 총 18,573건 중에 약 73%가 원가정보호로 최종결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행위자가 격리된다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학대행위자 없이도 남은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연계 등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김은정, 2016:38).

③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정부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한 약 23만명의 부모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연수자료에 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등의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2017: 4-5).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일회성의 교육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부모가 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진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①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규모를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예측한다면 위험행동이 발생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구체적 위기유형별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성매매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이미 다양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의 정기적 시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우리가 위기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행동의 최종적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는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의 전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배제되고 고립된 인간들은 더더욱 극단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기청소년들 비행청소년,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되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③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전경숙(2012: 11-12)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가정 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경우가 많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의 가출생활로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성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은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5.8%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2012: 8). 가정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갈등해결 등 가정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청소년의 이성교제, 임신, 출산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엄숙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과업은 학업과 장래준비에 있고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척이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을 한 청소년, 나아가 출산을 한 청소년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한부모 청소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지체계가 단절되고 학습권 보장이 안되며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사회에서의 차별도 심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이

설 땅은 별로 없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적절한 양육도 어려워지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나아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더 낳아서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출산청소년을 받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그들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생물학적인 설명이나 성에 대한 전통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의 성교육은 시대와 맞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신시 의료와 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 임신, 출산,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규모 집단상담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당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③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임신 출산 청소년들의 욕구 중 가장 긴급한 것 중의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다(백혜정, 2012: 196).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36).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의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설이 1-2개소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원이 찰 경우 다른 시설로 보낼 대안이 없다.

미혼모가 거주할 곳이 없어 켜질방을 전전하는 등 보호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은영, 김희균, 조소연, 유경희, 황정미, 김민지(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 system,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 WiFi**, vol. 16.
- 경찰청(2006-2016),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고용노동부(2012),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서울: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관계부처합동.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2016)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세종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세종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2016). **저출산 대책 평가(저출산 대책 기획평가 시리즈 6권)**.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병석, 서원석(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4호.
- 김선엽(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사회갈등**.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 유설희(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규, 황원식(2017).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ISSUE PAPER**.
-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보건복지포럼**, 03.
- 김지연(2013). 청소년한부모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개선방안 대책 토론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현 외 8인(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교원대학교.
- 김태현 외(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교원대학교.
- 김형모, 안재진, 최권호, 정해린(201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혜정(2012).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보호관찰**, 제12권 1호.
- 나유미·김미경(2012). 예비 부모세대의 가치관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유아교육학회지**, 16(2).
- 남윤인순(2013).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대검찰청(2006-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서울: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정부(2017).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정부.
- 박강용(2006).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모색. **사회과교육연구**, 13권 제1호.
- 박순창(201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1호(통권24호).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김현주, 이재연(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I-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7). **초·중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 개발연구 활용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6).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대전: 통계청.
- 보건복지부(2017).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성운숙(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윤정, 김윤희(2012).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박종서, 김은정, 기재량, 최인선(20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2014).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인경 외(200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목표 및 내용기준개발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 윤인경 외(2015).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교원대학교.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만우(2016). 제19대 국회 아동학대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161호,
- 이봉주(2016). **아동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기초발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이삼식, 최효진(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최인선(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주(2015).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0, no.1.
- 이인선, 윤덕경, 이미정, 김소영, 장화정, 김지영(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이재영(2017). 성경험 여자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 Res.* Vol. 23 No. 3.
- 이준(2013).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201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 대책연구 II 세미나자료집, **청소년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필화, 이명선, 노지은, 김성애(2017).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여성학논집**, 제34집 1호.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외(2005). **인구관련 초·중·고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전경숙(2012). **가출청소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해리 텐트(2015) (권성희 역). **2018 인구절벽이 온다 :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서울: 청림출판.
- 홍해숙 외(2011).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남녀의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2015).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준수, 임종윤, 권순영, 노규성, 이주연(2016).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감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2. 보도자료 및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626&cid=43659&categoryId=43659>(2017.11.30.).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2017). 아동학대 대책 1년,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인프라 증가(보도자료, 2017.3.27).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보도자료, 2016.11.1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중앙일보(2017).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7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2017.9.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홈페이지 <http://www.hifive.go.kr>.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 2020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E2%80%93who_are_we_and_how_do_we_live%3F).

European Commission (2015). Youth Report.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E2%80%93who_are_we_and_how_do_we_live%3F).

European Commission (2016). Evaluation of the EU Youth Strategy and the Council Recommendation on the mobility of young volunteers.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E2%80%93who_are_we_and_how_do_we_live%3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4972>(국민일보, 2018.1.16.).

<http://premium.mk.co.kr/view.php?no=21608> (매경프리미엄, 2018.3.1.).

PMG지식엔진연구소(2016).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0145&cid=43667&categoryId=43667>).

.....

부록

부 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ID

--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모색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인구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D동

<http://www.nypi.re.kr>

조사관련 문의

◆ 연구책임자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 조사담당자 : 임하린 연구원 (044)-415-2145

☆ 필독!!! ☆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소비와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인 ‘인구절벽’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출산력을 높여서 인구절벽 현상을 해소하려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구의 1인당 생산성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가 중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투자가 효과가 높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도 이러한 틀에 따라 교육, 노동, 복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는 양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미래의 출산력 제고를 위한 인구의식 강화와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질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자질 강화를 통해 생산성 높은 성장 동력으로 양성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분야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다음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칸을 늘려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구절벽 관련 현행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1. 출산력을 높임으로써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면, 생산가능인구를 15세~64세로 정의할 때, 적어도 15년~2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1-1.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기여할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2. 10년 후, 20년 후, 청소년인구가 급감한 미래사회에서도 청소년정책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청소년정책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 ① 타당성 있음 → 이유 :
- ② 타당성 없음 → 이유와 개선점 :

2.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복합혁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분야(활동, 보호, 복지)에서도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체계에 동의하신다면, 기존의 청소년정책 분야를 이 세가지 체계에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분류해주시요. 이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되어야 할 정책분야가 무엇인지 적어주시요.

2-1. 동의하는 경우(활동, 보호, 복지의 세부영역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 교육 :
- 노동 :
- 복지 :

2-2.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교육·노동·복지 외 추가 영역 :
- 전혀 새로운 분류체계 :

3.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세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양적 관리 측면에서 청소년이 미래의 인구재생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구의식을 강화(인구의 중요성 강조, 이성교제 및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육 등)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하는 정책이고, 둘째는 인구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강화(청소년활동의 강화, 아동학대 대책, 위기청소년 지원 등)와 청소년의 근로활동을 관리(연소자 노동인권 강화 등)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1. 동의한다

3-2. 동의하지 않는다 → 대안 :

4.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아동, 청년 포함) 관련 정책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적어주시고 어떤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1.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

4-2.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

4-3.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

4-4. 기타 관련 청소년정책 :

5. 향후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해야 할 부처들을 생각하시는대로 적어주시고, 각 부처별로 그 이유나 관련 과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대해 예시를 포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6-1.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 예) 청소년 관련 인프라 충분,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의 개입반응성이 높음

6-2.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약점

☞ 예)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 정책 사각지대가 있음,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낮음

6-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

☞ 예) 4차산업혁명, 인구감소로 인한 자원집중도 증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6-4.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

☞ 예) 일자리 축소, 청소년인구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 경기침체, 청소년정책의 규모 축소

II.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본원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4인: 55)”를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역량과 16가지 하위역량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핵심역량	하위역량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1-3.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에는 위에 열거한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 :

② 하위역량 :

2.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인구절벽 해소정책으로써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2-2.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관련 청소년 정책과제로써 인구교육 활동과 역량강화 활동 외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Ⅲ.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2.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2-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관련 청소년 정책과제로써 청소년 근로보호와 청년 고용대책 외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Ⅳ.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2. 가출, 성매매, 비행 등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2.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3.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2.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어주십시오.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복지 관련 청소년 정책과제로써 아동학대 대책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외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V.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교육, 노동, 복지 분야 외에도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청소년정책 분야와 과제가 있다면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에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특성

소속 및 직위	
성별	
연령(만)	
전문분야 근무경력(년)	

♡ 감사합니다 ♡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ID

--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모색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인구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D동

<http://www.nypi.re.kr>

조사관련 문의

◆ 연구책임자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 조사담당자 : 임하린 연구원 (044)-415-2145

※ 이하 문항에 대해 중요도 또는 동의하는 정도의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청소년정책 변화에 관한 의견

1.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강점

	강점	순위
1	다양한 부처에서 폭넓게 청소년정책 추진	
2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등 활동정책 인프라 구축	
3	청소년상담사,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 등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청소년학과 등 전문가집단 존재	
5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관심	
6	정책대상이 2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포함	
7	지식전달보다 역량증진의 중요성 높아짐	
8	사회내 청소년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이 다양함	
9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개입반응성이 높음	

2. 청소년정책의 내부적 약점

	약점	순위
1	청소년정책의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음	
2	정부 정책 중에서 낮은 인지도와 약한 사회적 파급력	
3	컨트론타워 부재로 부처간 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	
4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	
5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6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대상이 아님	
7	19세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림	
8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사각지대 발생	
9	청소년정책 분야의 축소	

3.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기회요인

	기회요인	순위
1	자원 집중도 증가로 양질의 초점화된 청소년 지원 가능	
2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주목	
3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4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외국 유학생의 유입 증가	
5	청소년문제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6	인구자질 향상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7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강화 활동 증가	
8	경쟁문화 완화 및 완전고용 가능성 증가	
9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 제고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협요인

	위협요인	순위
1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	
2	예산 및 사업 등 청소년정책 규모의 축소	
3	생식보건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 증가	
4	청소년에 대한 관심 감소 및 부정적 인식	
5	청소년 전문인력의 감소	
6	일자리 축소 및 인공지능과의 경쟁으로 청소년의 무력감 심화	
7	고령인구 부양 및 일자리에 대한 세대간 갈등 심화	
8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	
9	계층 양극화로 소수의 청소년 기회독점	

II.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교육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음	
2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역량강화 활동 미흡	
3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활동 및 지역격차 해소 미흡	
4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활동 취약	
5	입시위주 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 부족 및 소수의 청소년만 제한적으로 참여	
6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취약	
7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취약	
8	인구절벽 해소에 부합하는 역량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낮은 활용도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인구절벽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2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절벽 현상에 특화된 역량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	
4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	
5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6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7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	
8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9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10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	

2.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인구교육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2	인구의 중요성 인식에 그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성 인식이 안됨	
3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전문교재 부족	
4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음	
5	인구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지식 교육인지 의식 교육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6	이성교제나 성문제 등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 부족	
7	1회성 형식적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구관련 교육과정 부재	
8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음	
9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수용 교육이 포함되지 않음	

2-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2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3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4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	
5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6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	
7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8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9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실시	

Ⅲ.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노동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2	청소년 근로에 대한 편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미흡	
3	청소년 근로의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안전성 결여	
4	청소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	
5	청소년 근로보호와 고용정책이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6	청소년의 노동권보다는 소극적 보호정책에 그치고 있음	
7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8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음	
9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본교육 부재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2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3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4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 활성화	
5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	
6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7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	
8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	
10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	

2.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 고용대책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이 첨예함	
2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3	대졸 청년 고용대책에 치중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미흡	
4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대책 부족	
5	능력검증보다는 시험을 통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	
6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분야 전문기술 부족	
7	노동현장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	
8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종합적 접근전략 부재	
9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과 양육 유보	
10	적정임금 보장체계 미비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있음	

2-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2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3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	
4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	
5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	
6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분야 전문기술 교육	
7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 개선	
8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9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10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Ⅳ.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복지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

1.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아동학대 대책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2	신고체계에 의존하여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제도 미흡	
3	아동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	
4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어려움	
5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사후지원체계 미흡	
6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음	
7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미흡	
8	위기 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어려움	
9	처벌과 사건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음	

1-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아동학대 대책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2	전임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조기발견 및 개입	
3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4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5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6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도 제고	
7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8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9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인권교육 실시	

2. 가출, 성매매, 비행 등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	
2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미비 및 조기발굴 체계 미흡	
3	위기청소년 문제를 보호가 아닌 비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	
4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	
5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부족	
6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연계체계 구축 미흡	
8	위기청소년 문제발생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부족	
9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시설 건립 및 지원의 어려움	
10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2-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절벽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2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3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4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5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	
6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	
7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	
8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	
9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10	사법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	

3.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1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	
2	청소년 성교육이 형식적 대규모 교육에 치중됨	
3	청소년 임신, 출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 존재	
4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존재	
5	청소년의 성이나 재생산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부재	
6	임신, 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미비	
7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8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9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비	

3-2.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개선방안	순위
1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2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3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4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	
6	임신 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	
7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8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9	한부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Demographic Cliff and Youth Policy Initiatives

For predictions regarding the future and development of new policy initiatives, youth policies are needed, as the youth population is the source of demographic competitiveness. Further, a demographic cliff caused by the declining population is also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youth. Specific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mographic cliff's effect on youth demographics and lifestyles. The status of existing youth policies was examined, and new policy initiative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the demographic cliff were proposed; these included strategies for developing youth competencies to improve their demographic competitiveness or alleviating youth social problems.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and the Delphi method was used primarily. The number of subjects was 30, including 10 academic experts, 10 public servant experts, and 10 field experts.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The first survey was in the form of an open-ended questionnaire, whereas questions in the second one were in the multiple choice format. As a result,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ctivities to reinforce youth competencies and provide population education for youth should be pursued as a relevant policy initiative to modernize the educ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demographic cliff. As specific tasks for activities to reinforce youth competencies, the following should be performed first: long-term planning for competency reinforcement;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that includes instructors, various programs, and evaluation systems; pursuing policies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mographic cliff and competency reinforcement; and reinventing the conventional college education system that is exam-oriented

by establishing competency-based curricula and a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As specific tasks for activities that provide population education to youth, the following should be prioritized: providing population education via a liberal arts approach, with a shift in perceptions toward life; connecting with family policies providing parent education or strengthening family education to improve children's awareness about the population; and providing awareness education regarding the social responsibilities inherent in marriage and childbirth.

Second, youth labor protection and youth employment should be pursued actively as youth policy initiatives to revolutionize the labor system in relation to the demographic cliff. As specific tasks to promote youth labor protection, the following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mproving the current labor market, which imped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th; providing safe working conditions; strengthening guidance and supervision in youth workplaces; and shifting from youth labor protection policies to youth employment policies. As specific tasks to boost youth employment, the following should be given priority: preparing a comprehensive strategy such as designing career ladders and supporting employment suitable for each stage of life, strengthening youth workers' job security and improving non-regular workers' compensation, and address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toward certain occupations by ensuring appropriate wage levels through a systematic approach.

Third, child abuse prevention, support for youth at risk, and management of youth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sought actively as youth policy initiatives to reinvent the welfare system in relation to the demographic cliff. As specific tasks to prevent child abuse, the following should be performed initially: providing preventative support to parents at risk and strong intervention for child abusers; improving the post-child abuse support system, including providing a better

childrearing environment after child abuse is discovered; and strengthening parent education via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a and lifelong education.

As specific tasks to support youth at risk, the following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 at risk and establishing an early detection system, improving social perceptions so that youth at risk are not viewed as juvenile delinquents but as those who need to be protected,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o help youth at risk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or return to their families. As specific tasks to manage youth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following should be prioritized: establishing a culture in family and society that accepts youth pregnancy and childbirth; providing practical and small-scale youth sex education about pregnancy, childbirth, family, and respect for lif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pregnant youth or youth mothers.

Keywords: demographic cliff, youth competency reinforcement, population education, youth labor protection, child abuse prevention, support for youth at risk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인 쇄 2018년 4월 25일

발 행 2018년 4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84-4 93330

연구보고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